

러시아 탈 사회주의 체제전환과 사회갈등

연구책임자 | 조 한 범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KINU

통일연구원

러시아 탈 사회주의 체제전환과 사회갈등

연구책임자 | 조 한 범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KINU

통일연구원

러시아 탈 사회주의 체제전환과 사회갈등

인 쇄 2005년 12월

발 행 2005년 12월

발 행 처 통일연구원

발 행 인 통일연구원장

편 집 인 남북관계연구실

등 록 제2-2361호 (97.4.23)

주 소 (142-887)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6동 535-353

전 화 (대표) 900-4300 (직통) 901-2523 (팩시밀리) 901-2543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가 격 6,000원

© 통일연구원, 2005

통일연구원에서 발간한 간행물은 전국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 정부간행물판매센터: ·매장: 734-6818 ·사무실: 394-0337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시도서목록(CIP)	
러시아 탈 사회주의 체제전환과 사회갈등 / 조한범. — 서울 : 통일연구원, 2005	
p. ; cm. — (연구총서 ; 05-11)	
참고문헌수록	
ISBN 89-8479-335-3 93340 : ₩6,000	
340.929-KDC4	
320.947-DDC21	CIP2005002838

러시아 탈 사회주의 체제전환과

사회갈등 ▶▶▶

본 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목 차

I. 서 론	1
II. 탈 사회주의 체제전환과 사회변화	7
III. 탈 사회주의 경제체제전환과 러시아	15
1. 급진적 경제체제전환과 점진적 경제체제전환의 비교 ...	17
2. 러시아의 경제체제전환과정	25
가. 시장화 이전의 경제개혁	25
나. 옐친체제의 경제체제전환	34
다. 푸틴체제와 경제안정	46
IV. 탈 사회주의 체제전환기 사회변화와 갈등구조	51
1. 사회변화	53
2. 갈등구조 : 계급·계층구조의 재편	58

V. 정치지형의 재편 : 시장주의와 반시장주의의 갈등구조 ...	67
VI. 북한사회 변화에 대한 시사점	77
VII. 결 론	85
참고문헌	90
최근 발간자료 안내	96

표 목 차

<표 III-1> 주요 거시경제지표의 변동추이(1992~1997년)	44
<표 III-2> 외환위기 이후 러시아의 경제 지표	47
<표 III-3> 러시아 외환보유고 및 외채규모 추이	48

I

서론

러시아는 최근 BRICs의 한 국가로서 경제적 성장과 아울러 푸틴체제의 정치적 안정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혼돈스러웠던 지난 기간과 대비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러시아의 최근 모습을 구조화된 안정성으로 평가하기는 쉽지 않다. 그것은 러시아는 체제전환과정에서 발생한 사회갈등적 요소를 근본적으로 해소했다고 할 수 없으며, 푸틴체제의 안정성 역시 아직은 잠정적인 수준을 넘어섰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탈 사회주의 체제전환은 사회주의에 기초한 구체제의 해체와 아울러 새로운 시장체제를 형성한다는 점에서, 이해관계 및 사회적 관계의 총체적 재편과정을 수반하는바, 다양한 사회적 갈등이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러시아는 급진적 체제전환과정을 통해 시장화를 추구한 경우이며, 이 과정에서 특징적인 사회변화를 관찰할 수 있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사회주의는 자본주의와 근본적으로 다른 체제적 특성을 지닌다. 이는 사회주의 체제와 자본주의 체제는 근본적으로 다른 근대화과정을 거쳐왔다는 점에 기인한다. 사회주의는 자기방식을 통한 근대화의 한 경로를 걸어왔으며, 그 결과 역시 자본주의와 달랐다. 따라서 탈 사회주의 체제전환과정과 시장화 역시 자본주의와는 상이한 경로로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탈 사회주의 전환은 근본적으로 상이한 체제로의 이행이라는 점에서 다양한 갈등의 여지를 지니고 있다. 이와 같은 점에서 시장체제로의 탈 사회주의 전환 과정은 보다 상이한 근대화의 방식과 근대성간의 충돌을 야기하며, 이는 다양한 형태의 사회갈등의 지형을 이루게 된다.

러시아의 체제전환은 일반적인 사회변화와 다른 특성을 보인다. 러시아 체제전환기의 사회변화는 구체제의 해체를 전제로 한

다는 점에서 근대화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변화와 그 속성이 다르다. 사회에 있어서 변동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일반적 현상이다. 그러나 러시아의 체제전환은 사회적 합의와 미리 정해진 전략에 따라서 전 사회에 걸쳐 진행된다는 점에서 특징을 보인다. 특히 러시아의 경우는 산업화와 시장체제로의 전환을 점진적 방식으로 진행시키고 있는 중국과도 다른 특성을 보인다. 급진적 체제전환을 시도한 러시아의 경우는 구체제의 해체와 새로운 체제의 건설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상들이 특징적으로 나타나며, 그만큼 갈등의 요소를 내재하고 있다.

러시아의 체제전환은 러시아 사회에 복합적이고 전반적인 영향을 미치며 진행되는 과정이다. 체제전환은 러시아의 정치, 경제, 사회전반의 변화를 수반하는 복합적 변화과정인 것이다. 구소련의 사회주의 체제는 현존했던 사회주의 발전모델에 있어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시장경제로의 체제전환에 따른 사회변화를 특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러시아의 체제전환은 급진적으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급진적인 개혁은 구 사회주의 시기에 형성된 지배체제, 계급구조와 사회체제와 같은 구조적인 영향들이 개혁과정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의도했던 급진적 개혁의 효율성이 나타나지 못했다. 따라서 이행기 러시아 사회의 경우 개혁으로 인한 급진적인 사회변화와 구체제의 요소들의 지속적인 영향을 동시에 보여준 경우에 해당했다. 그리고 이는 다양한 사회갈등의 기본적 지형으로 작용했다.

본 연구는 사회주의를 자본주의와 다른 상이한 근대화과정으로 전제하고, 탈 사회주의 전환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갈등의 제 형태에 대해서 논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탈 사회주

의 체제전환과정 속의 사회변화 및 사회갈등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러시아 사회를 심층 분석함으로써 탈 사회주의 전환과정의 변화양태를 해명하고, 사회갈등의 관점에서 북한사회 분석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러시아의 사례를 통해 급진적 탈 사회주의 체제전환과정의 사회갈등과 사회변화양태를 이해할 수 있으며, 북한사회의 변화에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의 체제변화 및 예상되는 사회갈등에 대한 예측과 해명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남북한 사회통합과정에 야기되는 문제점들의 분석과 대책마련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II

탈 사회주의 체제 전환과 사회변화

탈 사회주의 체제전환에 대한 분석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문제의식은 사회주의 체제를 경유한 국가들에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어떻게 형성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은 근본적으로 전통에서 근대사회로의 이행이라는 역사적 과정과 유사성을 발견할 수 있는가(modernization theory), 아니면 이와 다른 새로운 과정인가(transitology)라는 서로 다른 방법론적 접근속에서 구체화 되어왔다.¹ 우선 이미 오랫동안 연구되어온 접근법인 근대화론적 관점의 경우, 시장경제와 민주주의 체제의 형성이라는 역사적 과정의 일반성에 주목하며, 이로부터 도출되는 명제들을 탈 사회주의 체제전환과정에 접목시킨다. 그러나 탈 사회주의 체제전환의 고유한 특성에 주목하는 경우, 전환의 과정과 특성이 전통에서 근대로의 변화와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러나 두 접근 모두에서 발견할 수 있는 공통성은 탈 사회주의 체제전환을 지배하는 핵심적 요소는 시장화로 요약될 수 있는 경제체제전환이며, 이는 사회변화를 추동하는 직접적 변수라는 것이다.

그러나 탈 사회주의 체제전환의 이해에 있어서 보다 중요하게 언급되어야 하는 점은 ‘사회주의의 경험’에 대한 것이다. 사회주의 체제는 자본주의 체제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산업화와 ‘사회주의형 근대화’ 과정을 겪어 왔다. 따라서 발전이라는 동일한 기준으로 사회주의 체제의 특성들을 포착하는 시도에는 무리가 따르게 된다. 예를 들어 사회주의적 근대화의 결과는 자본주의와 다

¹ Jordan Gans-Morse, “Searching for Transitologists: Contemporary Theories of Post-Communists Transitions and Myth of a Dominant Paradigm,” *Post-Soviet Affairs*, Vol. 20, No. 4 (2004), pp. 320~349.

른 행위주체 즉 ‘사회주의적 인간형’을 도출해 내며, 이들의 인성과 행위양태는 자본주의와 본질적으로 차이를 나타내게 된다.²

사회주의는 전근대 사회가 아니라 사회주의를 경유한 근대화 과정을 거쳐왔다는 점이다. 따라서 사회주의 체제는 자본주의 체제와 근본적으로 다른 근대화과정을 경유했다. 사회주의를 근대화의 한 과정으로 볼 수 있느냐에 대한 논쟁에도 불구하고 근대화를 종교와 자연으로부터 인간이성의 해방과정으로 전제할 경우 사회주의는 자기방식을 통한 근대화의 한 경로를 걸어왔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우리가 경험한 근대화는 두 가지 경로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자유(보다 엄밀하게 말해 자본의 자유)를 핵심적 테마로 한 자본주의적 근대화는 베버의 표현을 빌면 수단목적합리성을 강화시켜온 측면이 있다. 반면 공동체를 테마로 한 사회주의적 근대화는 공동체라는 가치합리성에 핵심적 의미를 두고 진행되어 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상이한 테마를 주제로 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는 결과적으로 상이한 ‘근대인’을 탄생시키게 되는 태생적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주의와 자본주의가 결과한 ‘근대성’은 차이가 있으며, 이는 보다 본질적인 근대화의 방식에 기인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³ 이와 같은 특성들은 경제체제전환과정의 방식에 따라서 변화의 양태가 다르게 나타나게 된다.

² 전성우는 ‘사회주의적 인간형’의 이념형적 규정으로 경제-사회적 관점에서 ‘공동체적 연출인간’, 정치적 관점에서 ‘관료적 신민’을 제시하고 있다. 전성우, “동서독 통일과정의 사회학적 함의,” 김명수, 이연택 외, 북한사회의 이해 (서울: 한양대학교 출판원, 1997), pp. 415~423. 이와 같은 특성은 자본주의적 근대화의 결과와 다른 것이며, 사회주의적 근대화의 사회·경제적, 정치적 결과였던 것이다.

³ 조한범, “북한사회연구의 쟁점과 과제” (북한연구학회발표문, 2004), pp. 11~12.

탈 사회주의 체제전환의 핵심은 시장화에 있으며, 따라서 경제적 변화는 사회변화와 새로운 갈등의 구조적 기초를 형성하게 된다. 러시아에서 사회주의의 해체와 시장경제를 건설하는 급진적 정책의 수행은 여러 가지 사회적 변화를 수반하고 있으며, 이는 사회주의 저발전 상태에서 시장체제로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 중국 및 기타 국가의 점진적 체제전환과 다를 수밖에 없다.

체제전환의 방식과 결과는 사회변화에 직접적 영향을 주며, 결과적으로 새로운 사회형성의 구조적 기초를 형성하게 된다. 따라서 체제전환 방식의 이해는 탈 사회주의 체제전환기 사회의 이해에 있어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가장 중요한 비교의 준거는 급진적 체제전환의 경우 사회주의 사회의 ‘해체’를 통한 체제전환 전략을 채택하고 있는 반면, 점진적 체제전환을 시도하는 국가들의 경우 저발전 상태에 있었다는 점에서 해체의 부담에서 벗어나 ‘새로운 건설’에 주력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급진적 전환과 점진적 전환과정에서 ‘해체’와 ‘건설’에 따른 상이한 사회적 변화들이 야기된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서 급진적 체제전환의 경우 사회해체가 급속하게 진행되는 반면, 점진적 체제전환의 경우 개발도상국의 초기적 근대화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성들이 발견된다는 점이다.⁴

점진적 체제전환을 시도한 중국의 경우 사회주의적 근대화의 경험은 상대적으로 미약했으며, 사회주의적 발전과 공업화의 수준도 구 소련에 비해서 현저하게 뒤쳐져 있었다. 따라서 중국의

4 이와 같은 점에서 중국의 점진적 체제전환과정에서 한국의 70년대 근대화과정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변화와 유사한 특성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경우 체제전환에 따른 사회적 변화는 사회주의적 외피속에서 자본주의적 근대화를 진행시키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중국에 있어 체제전환에 따른 사회적 변화의 특성은 자본주의적 근대화에 따른 사회적 변화의 특성을 상당부분 내포하게 된다. 고도성장과 도시화, 핵가족화, 소비생활의 비약적 발전 등 자본주의적 산업화에 따른 사회적 변화의 특성을 수반하게 된다.

그러나 고도로 발달된 사회주의 체제를 건설하고 높은 수준의 사회주의적 공업화를 이룬 러시아의 체제전환은 근대화의 추구가 아니라 사회주의적 발전을 시장경제에 기초한 새로운 특성으로 대체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기존체제의 해체와 새로운 체제의 건설을 동시에 진행시켜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러시아의 경우 해체에 수반되는 사회적 변화가 다른 저발전 사회주의 국가에 비해 훨씬 크게 나타나게 된다. 러시아의 체제전환에 따른 사회적 변화 및 부정적 특성이 부각되어 나타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점에 기초한다. 구체제에서 형성된 수많은 특성들은 새로운 체제건설과정에서 변화와 새로운 적응을 요구받고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생활세계의 주인인 러시아인들의 일상적 삶의 근본적 변화를 요구하는 것과 다르지 않게 된다.

사회주의의 몰락과 시장경제로의 급진적 체제전환과정은 사회주의 체제에서부터 장기간 형성되어온 구조적 특성들을 일거에 해소할 수 없었다. 오히려 역설적으로 사회주의의 몰락 직후 나타난 새로운 요소들은 사회주의 시기의 유산을 온존시켰으며 시장경제로의 체제전환에 필요한 문명 적응력들의 형성을 제약했다. 체제전환기라는 특수성은 새로운 몇 가지 부정적 요소들을

추가시켰다. 첫째로 아노미 혹은 가치론적인 혼돈의 확산과 규범, 가치, 확고한 규칙, 삶의 정당한 방식들에 대한 방향감각 상실현상이 발생했다. 과거가 부정되지만 새로운 대체물들이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람들은 불확실성 속에 내던져졌고 사회적인 고립속에서 타인들에 대한 적대감을 표출했다. 둘째로 새로운 부와 권력, 위신의 획득을 통해서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새로운 기회의 등장은 규율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야만적 경쟁체제를 야기했다. 이와 같은 경쟁체제에서의 이익은 크지만 아직 ‘게임의 규칙’이 발달되지 않은 상태라는 특성을 지닌다. 셋째로 확고했던 내적 혹은 외적인 사회통제가 일시에 사라졌다는 점이다. 경찰력과 사법제도는 정당성을 상실했다. 전체주의적 기원 속에서 형성되었다는 점에서 법체계는 권위를 잠식당했다. 마지막으로 서구화의 추구는 의도하지 않았던 결과들을 가져왔다. 국경이 열리자 서구의 가치 있는 생산물들보다 포르노와 마약, 야만성과 신비주의, 조직범죄와 일탈적인 삶의 방식들을 포함하는 저질의 소비자 대중문화가 포스트 사회주의 체제전환의 사회로 밀려 들어왔다. 장기간의 사회주의가 결과한 특성들이 포스트사회주의를 규정하는 지배적 요소로 기능하고 있으며, 사회주의 붕괴 이후 혼돈된 상황의 부수적인 결과들은 포스트사회주의 국가들의 시장경제체제로의 ‘적응력’을 저해하고 있으며 ‘비적응력’들을 온존시키고 있는 것이다. 적어도 체제전환의 초기적 과정에 있어 구체제의 특성들이 강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체제전환기 사회의 변화는 경제체제의 변화와 밀접하게 연결되고 있다. 특히 급진적 체제전환의 특성에 따라서 경제구조의 변화가 특징적으로 나타난다. 국가통제는 급속히 약화되지만 구

체제의 특성인 독점화는 약화되지 않으며, 이익집단들에 의한 조합주의적 통제가 나타난다. 이들에 의한 자원분배체제의 통제는 독점화된 부분에 대한 자원의 특혜적 분배와 그렇지 못한 부분의 소외현상을 초래한다. 또한 급진적 사유화는 구체제의 소유관계의 급격한 변화를 야기시키며, 이 과정에서 구체제의 지배세력들이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와 같은 전반적인 상황은 경제의 지하경제화와 범죄화라는 지형과 밀접히 연관되어 발생한다. 자율적인 경제주체들의 형성을 목적으로 했던 사유화과정에 대한 지배세력들의 개입은 일반주민들에게 기회의 박탈과 제약을 가져온다. 따라서 이를 바탕으로 체제전환기 사회주의 국가들에 특징적인 사회적 측면이 나타난다. 체제전환기 경제체제의 재구조화와 이에 따른 침체는 사회주의 복지체제의 전면적인 약화와 실업을 야기하며, 범죄 문제 등 다양한 차원에서 사회적인 문제들을 발생시키고 있다. 특히 시장경제로의 체제전환은 러시아 사회에 필연적인 새로운 사회분화를 발생시킨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안정된 계층구조를 구성하고 있던 구소련의 사회구조가 시장화에 따라 불평등 사회로 전환하는 과정은 구사회의 해체를 수반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갈등의 기초로 작용하게 된다.

III

탈 사회주의 경제체제 전환과 러시아

1. 급진적 경제체제전환과 점진적 경제체제전환의 비교

사회주의 경제체제는 성립초기부터 크고 작은 개혁들을 지속해 왔다. 그러나 냉전체제의 붕괴를 전후한 동유럽과 구소련 지역의 경제개혁은 이전의 경제개혁과 규모와 속도 그리고 성격상 본질적 차이를 나타냈다. 과거 사회주의 국가들의 경제개혁은 체제유지를 전제로 체제내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려 했던 것이었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 이후 동유럽과 구소련 지역 대부분에서 실시된 경제개혁은 시장경제체제로의 체제전환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체제전환의 의미를 띤다. 아직 공식적으로 사회주의 정권을 유지하고 있는 중국의 경우도 결국 시장기제의 성장에 따라 계획기제들이 축소된다는 점에서 이와 같은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다.

구사회주의권 국가들의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과정은 유형에 따라 서로 다른 특징을 나타냈다. 대체로 동유럽과 구소련 지역의 급진적 경제체제개혁의 특성을, 중국 및 아시아 사회주의권의 점진적 경제체제개혁의 특성을 나타냈다. 또한 각 국가의 특성에 따라서 경제정책의 시행과 그 결과도 다르게 나타났다. 구소련 지역의 국가들이 경제체제개혁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은 데 비해서 헝가리, 폴란드, 체코 등은 비교적 빠르게 회복국면에 접어들었다. 아시아 사회주의권의 경우 중국의 경제개혁과정은 상징적인 의미를 지녔다. 점진적이고 순차적인 경제체제개혁을 택했던 중국은 지속적인 성장을 구가했으며, 천안문사태를 제외하면 정치적인 갈등도 상대적으로 작았다. 이와 같은 사회주의권의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과정은 체제전환경로와 적합한 경제개혁정책

에 관한 다양한 논의들을 형성시켰으며, 이를 바탕으로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체제전환에 대한 일반화도 시도되고 있다.

급진적 체제전환과 점진적 체제전환에 대한 이상적 분석대상은 존재하지 않으며, 이와 같은 점에서 러시아와 중국은 급진적 체제전환과 점진적 체제전환의 현실적 모델로 다루어 질 수 있다. 러시아와 중국의 경제개혁은 공통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양국은 시장경제가 효율적이라는 점에 동의하고 있으며, 계획경제체제를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두 국가 모두 사회주의의 경제체제를 시장경제체제로 편입시키는 데 있어 유사한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국가의 구조적인 상이성에 따라서 개혁정책의 경로와 방법이 다르게 시행되었다. 러시아의 경우 1992년 초 가격자유화를 시작으로 자유화·안정화·사유화정책들이 급진적으로 실시되었으나 개혁에 따른 긍정적 효과가 즉각 나타나지 않았다. 대신 초인플레이션과 지속적인 생산감소가 경제체제전환기의 부정적 특성들로 나타났다. 그러나 최근 러시아 경제가 주요 시장화조치를 완성하고, 구조적인 재조정을 마무리함에 따라 발전의 추세에 접어들고 있다는 평가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미 러시아는 BRICS의 한 국가로서 평가받고 있음을 주목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의 경제체제개혁은 러시아에 비해서 매우 조심스럽게 진행되었다. 경제개혁조치들은 소규모 실험으로부터 시작하여 순차적으로 확대되어 나갔다. 점진적으로 시행된 중국의 개혁은 러시아와 달리 성장을 구가했다. 특히 서비스와 농업 그리고 수출부문의 성장이 두드러졌다. 그러나 중국은 전반적인 시장경제의 형성을 목표로 한 러시아와 대조적으로 경제개혁의 최종 목적지에

대해서 명쾌한 해답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러시아와 중국은 경제체제의 구조적인 특성과 출발조건 그리고 개혁전략의 형태 등에서 차이를 나타냈다. 두 국가의 구조적 특성들의 이해와 이를 바탕으로 한 경제개혁과정과 결과의 비교 검토는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전환에 대한 유의미한 일반적 함의를 지닌다 할 것이다. 러시아와 중국의 경제체제개혁의 비교, 분석은 러시아의 경제개혁을 사회주의 경제체제전환과정이라는 일반적 틀속에서 이해하는데 유용할 수 있을 것이다.

각 국가들이 가지는 특수성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 경제체제는 일반적으로 소유권행사의 지배적 형태로서의 집단적 소유화, 자원분배의 우선적 기제로서의 중앙집중적 계획, 경제부문에 있어서 공업분야 특히 중공업분야의 선호와 서비스부문의 제약, 농업의 집단화 등의 특성을 공유하고 있었다.⁵ 탈 사회주의 경제체제개혁은 이와 같은 특성들의 변화를 요구한다. 소유권의 지배적인 형태인 집단적 소유권은 민영화과정을 거치거나 자율적 자본형성과정을 통해서 개별적인 경제주체들에게 이양되어야 한다.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자원분배의 독점적인 힘이었던 계획은 시장을 통한 수요와 공급의 원리로 대체된다. 또한 시장체제에서는 정치적 논리에 의한 경제의 절대적 종속현상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시장원리에 기초한 경제의 자율적 조절기능이 회복되어야 한다.

사회주의를 경험한 국가들이 실시한 경제체제개혁은 대체로 두 가지 형태를 보였다. 첫 번째는 ‘점진적인 경제체제개혁’이다.

⁵ J. Sachs & Wing Thye Woo, “Experiences in the Transition to a Market Economy,” *Journal of Comparative Economics*, No. 18 (1994), p. 271.

이는 시간적으로는 점진적으로 시행하며, 부분적인 범위에 제한하는 특징을 보이기 때문에 점진적 경제체제개혁으로 지칭된다. 점진적 경제체제개혁은 경제성장형(growth-led transformation)의 경향을 보이며, 중국 등 아시아 공산주의 국가들이 이에 해당한다. 이들 국가는 비국영 기업의 급속한 증가와 국유부문의 상대적 축소로 특징지어지는 개혁에 힘입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성장을 했다. 성장형 개혁과정에서 사기업 혹은 준 사기업들의 역할이 중요한 의미를 지녔으며, 점차 국유기업을 능가할 것으로 믿어졌다. 두 번째는 ‘급진적 경제체제개혁’으로서 단기간에 전반적인 개혁을 완수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경제체제개혁은 단기간에 구체제를 해체하고 새로운 시장요소들을 이식하며, 개혁의 범위도 경제체제 전반을 포괄한다. 급진적인 개혁의 시행자들은 사유화와 거시경제의 안정화조치를 실시하고 사유화과정을 통해서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믿었다. 그러나 동유럽과 러시아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났듯이 단기적으로는 경제후퇴형(recession-led transformation)의 경향성을 보였다.⁶ 성장형과 비교했을 때 전면적인 재구조화과정에서 일시적인 생산의 감소와 경기후퇴, 그리고 국유기업의 급속하고 광범한 축소가 발생한다.⁷

⁶ 경제성장과 후퇴의 경향은 시간적인 경과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동유럽 일부 국가들의 경우 1993~1994년에 이미 부분적으로 체제전환기의 경기후퇴를 회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제전환기의 경기후퇴는 사람들에게 상대적으로 낮은 기대치를 가지게 했으며 새로운 성장가능성을 열어놓았다. 따라서 경제후퇴형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고통을 수반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점진적 성장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 Laszlo Csaba, “The Political Economy of the Reform Strategy: China and Eastern Europe Compared,” *Communist Economies & Economic Transformation*, Vol. 8, No. 1 (1996), p. 60.

⁷ Minxin Pei, “Microfoundations of State-Socialism and Patterns of Economic Transformation,” *Communist and Post-Communist Studies*, Vol. 29, No. 2

삭스(J. Sachs)와 립튼(D. Lipton)을 비롯한 급진론자들⁸은 충격요법(shock therapy)혹은 빅뱅(big bang)⁹으로 불리는 급진적 개혁이 사회주의경제의 체제전환에 효율성을 발휘한다고 주장했다. 급진론은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전환과정에서 급진적인 방식이 필요한 이유들로 다음을 들고 있다. 첫째, 전체적인 개혁의 요소들은 상호의존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점진적인 변화는 효과를 발휘할 수 없다. 둘째, 시장의 형성으로 사회주의 체제가 구축한 강력한 관료제도와 기득권세력의 저항을 극복해야 한다. 따라서 경제체제개혁은 새로운 체제가 구체제의 저항을 제압할 수 있게 빠른 속도로 동시에 그리고 심도있게 진행되어야 한다. 셋째, 부분적인 개혁은 구체제의 요소들을 온존시키게 된다. 넷째, 새로운 경제규칙들과 제도들은 혼돈과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신속히 그리고 단호하게 시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급진주의적 체제전환론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개혁정책의 실

(1996), pp. 131~132.

- ⁸ 급진적인 경제체제개혁을 주장하는 논의는 다수가 있으며, 여기에는 D. Lipton & J. Sachs, "Creating a Market in Eastern Europe: the Case of Poland," *Brookings Papers on Economic Activity*, No. 2 (1990); J. Sachs & D. Lipton, "Poland's Economic Reform," *Foreign Affairs*, Vol. 69, No. 3 (1990); J. Kornai, *The Road to a Free Economy* (New York: W. W. Norton, (1990); A. Aslund, *Post-Communist Economic Revolutions: How Big a Bang?* (Washington, D.C.: The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1992) 등이 있으며, IMF, World Bank, OECD, 그리고 EBRD와 같은 서방의 국제시장 경제기구들도 같은 입장을 견지했다.
- ⁹ 급진적인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전환을 설명하기 위해서 빈번히 인용되는 충격요법과 Big Bang은 엄밀하게 구분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지는 않으며, 용어의 사용에 있어서도 일반적인 합의가 있는 것은 아니다. 경우에 따라서 충격요법은 Big Bang의 부분적인 요소로 사용되어지기도 하고, 또 때로는 그 반대의 의미로 쓰여지기도 한다. Ian Jeffris, *Socialist Economies and the Transition to the Market* (London: Routledge, 1993), p. 333.

시를 주장했다.¹⁰ 첫째, 전반적인 가격자유화를 단행한다. 둘째, 화폐를 현실적인 수준까지 평가절하하고, 무역장벽을 제거함으로써 대외경제관계를 자유화한다. 셋째,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거시경제정책 등을 통한 안정화정책을 채택한다.¹¹ 넷째, 생산과 투자결정의 분권화와 사적 경제활동의 합법화, 그리고 사유화를 실시한다.

급진적인 경제체제전환론은 동시에 여러 가지 비판을 받았다. 중심적인 비판은 구체제의 유산을 물려받은 국가들이 단기간에 시장체제를 형성하고 경쟁체제에 적응한다는 것은 사실상 무리라는 것이다. 사회주의가 형성한 구조적인 특성들(노동에 대한 태도, 노동시장의 경직성 등)도 일시적인 처방에 의해서 해결되지 않는다. 급진적인 경제체제의 전환은 전체적인 산업의 구조적인 재편을 가져오고 이는 인플레이션과 생산감소를 매우 심각한 상태로 만든다. 이 과정은 전 사회적인 궁핍화를 수반하고 결과적으로 개혁에 대한 사회적인 저항의 토대로 작용한다.¹² 체제전환의 속도 역시 논쟁의 대상이 된다. 3~5년 사이의 짧은 기간에 서구적인 의미의 시장경제체제가 과연 가능할 수 있는가 라는 것

10 Wing Thyee Woo, "The Art of Reforming Centrally Planned Economies: Comparing China, Poland, and Russia," *Journal of Comparative Economics*, No. 18 (1994), p. 277.

11 이에 따르면 인플레이션과 거시경제 불균형의 해소를 위한 안정화정책으로 강력한 긴축정책이 시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국유기업들에 대한 연성예산 편성(soft budget)을 중지해야 하며, 국유기업의 독점을 해체하고 이들의 운명이 궁극적으로 경쟁체제에 의해서 결정되도록 해야 한다.

12 동구와 러시아의 경우 선거혁명을 통한 정치적인 민주화가 경제개혁과 동시에 수반되어졌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도입된 선거제도는 역설적으로 경제개혁에 대한 사회적인 저항의 수단으로 이용되었다. 러시아의 경우 1990년대에 치러진 몇 차례의 선거를 통해 개혁에 비판적인 좌파와 민족주의세력이 지배적인 정치적 영향력을 확보했고, 결국 경제개혁 프로그램의 일관성 있는 추진을 어렵게 만들었다.

이다. 또한 급진적인 체제전환론에서 주장하는 개혁정책들의 우선순위 부여도 논란거리이다.

점진적인 체제전환론을 옹호하는 논자¹³들은 경제체제전환은 일정한 과정을 거쳐 순차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들의 논지에 따르면, 경제체제개혁은 구 경제구조의 점진적 해체, 사적경제 활동의 장려와 점진적 사유화 등의 정책을 통하여 하며,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점진적 경제체제 개혁의 핵심은 사회주의경제의 틀을 일정기간 유지하면서 시장요소들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즉 국유부문과 사유부분으로 나누어진 이중경제구조를 유지하는 것이다. 점진적 체제개혁은 초기에 구체제의 변화를 피하면서 시장경제 요소들의 활성화를 위해 자원을 집중시킨다. 이와 같은 초기단계의 조치는 장기적으로 생산적인 시장경제를 위한 제도적 환경을 형성하는데 필요한 자원의 동원을 가속화한다. 새로운 시장경제부문이 충분히 성장한 후에는 그 스스로가 변화의 원동력이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시장경제부문에서 성장한 인적·재정적·사회적 자원들은 국유부문의 사유화와 개혁에 이용되어진다. 시장경제의 성장은 상응하는 사회적인 변화를 수반하게 되고 이는 경제체제개혁에 순

13 점진주의론의 입장을 견지하는 논의들에는 Peter Murrel의 “Evolutionary and Radical Approaches to Economic Reform,” *Economics of Planning*, Vol. 25, No. 1 (1992)와 “What is Shock Therapy,” *Post-Soviet Affairs*, Vol. 9, No. 2 (1993)가 있으며, G. Calvo & J. Frenkel, “Credit Markets, Credibility, and Economic Transformation,”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Vol. 5, No. 4 (1991); S. Fischer & A. Gelb, “The Process of Socialist Economic Transformation,”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Vol. 5, No. 4 (1991); R. Mckinnon, “Taxation, Money, and Credit in a Liberalizing Socialist Economy,” *Economics of Planning*, Vol. 25, No. 1 (1992); J. Hausner, B. Jessop and K. Nielson eds., *Strategic Choice and Path-Dependency in Post-Socialism* (Edward Elgar, 1995) 등이 있다.

기능적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친 사유화는 개혁초기에 사유화되었을 경우보다 효율적이라는 것이다.¹⁴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바람직한 전환유형과 이를 위한 개혁정책의 형태에 대해서 일반적인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다. 개혁이 점진적 혹은 급진적이어야 하는지, 개혁정책들이 동시에 혹은 순차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는지, 만일 순차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면 어떠한 순서대로 우선순위를 매길 것인지 등에 대해서 일반적인 합의를 가지고 있지 않다. 또한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시장체제로의 체제전환과정을 설명하기 위한 급진론과 점진론의 차이는 다분히 이론적인 수준의 논의이다. 이들은 이론적인 수준에서도 각 입장마다 통일된 합의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실제 각국의 개혁정책은 점진적 개혁정책과 급진적 개혁정책이 다소 혼합된 형태로 실시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진론과 점진론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은 사회주의 경제체제전환과 개혁정책의 분석에 유용한 이념형으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러시아의 경제체제개혁은 급진적인 특성들을 지닌 것이었으며, 중국의 경우는 점진적인 특성들을 나타냈다. 러시아에서는 1992년 초의 가격자유화를 필두로 자유화·안정화·사유화 등의 정책들이 급진적으로 실시되었다. 특히 초기의 경우 자유화와 사유화는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의도했던 긍정적 효과가 즉각 나타나지 않았으며 초인플레이션과 생산감소 등 부정적인 특성들이 최근까지도 특징적으로

¹⁴ Peter Murrel, "What is Shock Therapy," *Post-Soviet Affairs*, Vol. 9, No. 2 (1993), p. 125.

나타났다. 러시아의 경제개혁에 비해서 중국의 경우는 점진적 특성을 띠고 있었다. 형식적으로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공산당이 정치권력을 장악한 상태에서 시행된 중국의 개혁은 러시아에 비해서 서비스, 농업, 수출부문의 성장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중국의 점진적 경제개혁과정의 지속적인 성장을 나타냈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를 비롯한 동구권의 구사회주의 체제가 중국의 개혁을 주목하지 않고 다른 경로를 선택한 것은 경제체제개혁에 대한 목표가 상이했기 때문이었다. 러시아는 사회주의 내부의 개혁이 아니라 최종적으로는 완전한 의미의 시장경제체제를 구축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반면 중국지도부는 개혁의 최종 목적지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수구세력과 개혁세력으로 나뉘어 있었다.¹⁵ 따라서 중국의 점진주의적 개혁은 특별한 이론적 기반을 가진 것이라기보다는 이와 같은 양 정치세력간의 정치적 교착상태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다.

2. 러시아의 경제체제전환과정

가. 시장화 이전의 경제개혁

러시아의 경제개혁은 사회주의 시기의 부분적 개혁, 고르바초프에 의한 페레스트로이카, 그리고 1991년 말 이후 러시아 연방

¹⁵ 중국의 스탈린주의세력은 새(경제)는 새장(계획)이 없으면 날아가 버린다는 '새장경제론'으로 경제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정당화했다. 반면 개혁세력은 시장경제론을 주장했으며, 이를 통한 새로운 형태의 사회주의가 중국에 가능할 것이라고 믿었다. Wing Thyee Woo, "The Art of Reforming Centrally Planned Economies: Comparing China, Poland, and Russia," pp. 279~280.

체제의 전반적이고 급진적 시장체제로의 이행기로 대별되어질 수 있다.

대대적인 서구화정책을 실시했던 뽀뜨르대제의 개혁정책 이후 러시아의 개혁의 역사를 관통하는 문제의식은 ‘러시아의 후진성’에 관한 문제였다. 그것은 바로 러시아가 유럽의 선진성에 비해서 후진국가였고, 따라서 후진성의 극복은 유럽의 진보된 방식을 도입하는 것으로 귀결되었다. 혁명 이후 탄생한 소련 사회주의 체제도 지속적인 체제개혁을 추구해왔다, 이는 기본적으로 사회주의 체제내적 개혁의 특성을 지녔으며, 사회주의의 구조적 모순을 해소하지 못했다. 사회주의 시기동안 경제발전을 위한 기업의 자주성 증가, 관료통제 기제 약화 등의 시도가 있었으나, 이는 행정-명령경제체제의 본질을 변화시킬 수 없었으며, 사기업의 부활은 결코 상정되지 못했다. 그러나 사회주의 계획경제가 낳은 비효율성들은 끊임없는 개혁을 요구했다. 따라서 소련 사회주의 체제내에서도 경제의 불합리성을 개선하려는 시도들이 이루어졌다.¹⁶ 그러나 경제개혁의 방향성은 체제내적 개혁이었으며, 따라서 시장체제개혁과는 거리가 멀었다. 결과적으로 소련사회에서 국가권력과 관료지배체제는 약화되지 않았다. 모든 산업의 국유화 이후 중앙집권적 행정-명령체제가 사회를 지배하였다. 협동조합부문과 집단농장도 실질적으로는 국가기구에 속했으며, 자율적인 운영이 불가능했고 상부로부터의 직접적인 명령에 의해서 기능했다.¹⁷ 국가기구의 집행장치들이 생산수단의 소유자였고, 노

16 Н. В. Воротилов, *Экономическая самостоятельность предприятий в рыночном хозяйстве* (СПб, 1993), pp. 16~27.

17 Э. Ф. Борисов, *Проблемы развития экономики нашей страны* (1993), pp. 77.

동자들은 국가의 피고용자였다. 노동자들은 소외되었고, 주어진 명령을 수행하는 수동적 존재에 불과했다. 소련의 경제개혁은 구조적 문제점들에 대한 인식이 결여된 피상적인 것에 불과했으며, 위로부터의 시도였다. 따라서 사회주의경제의 비효율성의 주된 원인인 행정-명령체제와 중앙집권화된 권력과 관료체제는 개선되지 않았으며, 탈 사회주의 체제전환기에 부담스러운 유산으로 물려주었을 따름이었다.

사실상 고르바초프가 전면에 나서기 시작한 1985년 이전에도 소련경제는 보다 본질적인 구조전환을 요구받고 있었다. 소련의 붕괴는 다양한 요소들의 결합으로 발생한 것이지만¹⁸ 경제의 구조적인 침체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사회주의 초기의 강압적인 공업화과정에서 나타난 급속한 경제성장은 점차 둔화되어 1960년대는 6%로, 1980년대는 2%대로 저하되고, 마침내 1990년에는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이와 같은 소련경제의 하향화는 계획과 행정-명령경제체제가 지닌 구조적인 결함의 산물이었다. 베셀코프는 소련경제의 와해를 초래한 구조적 결함을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¹⁹ 첫째, 기업들은 보다 적은 계획생산량을 할당받으려 노력했고, 반대로 보다 많은 장려금을 받으려고 노력했다. 둘째, 노동자들은 가능한 한 노르마(작업정량)를 줄이려고 노력했다. 셋째, 과학-기술적인 진보에 대해서 기업들이 무감각

¹⁸ Dallin은 소련의 붕괴가 통제의 이완, 부패의 만연, 이데올로기의 와해, 사회적 변화, 국제환경의 변화, 경제적인 침체, 그리고 고르바초프 시기의 개혁의 영향 등 다양한 요소들의 상호작용의 결과로 설명하고 있다. Alexander Dallin, "Causes of the Collapse of the USSR," *Post-Soviet Affairs*, Vol. 8, No. 4 (1992), pp. 279~302.

¹⁹ Ф. С. Весельков, "Нужная рыночная экономика," *Введение в рыночную экономику* (СПб: Издательство СПбГУ, 1991), pp. 19~21.

했다. 넷째, 생산원료가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메커니즘은 낭비적이었다. 다섯째, 기업들이 생산품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했다. 여섯째, 발전과정에서 외연적 경제체제를 내연적 경제체제로 전환시키지 못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산의 효율성에 대해서 거의 전적으로 무관심했다. 이와 같은 요인들은 소련경제가 지닌 구조적 결함들이었으며, 이 문제들의 해소가 경제개혁의 주요 목표였다.

경제개혁은 고르바초프 이전의 시기에도 꾸준히 제기되어 온 문제였다. 페레스트로이카 이전에도 경제의 불합리성을 개선하려는 몇 차례의 시도가 이루어졌다.²⁰ 그러나 그것은 소련사회에 대한 구조적인 인식이 결여된 피상적인 것에 불과했으며, 본질적인 처방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다. 따라서 고르바초프 등장 이전까지 행정-명령경제체제에 의해서 유지되는 사회주의 계획경제는 거의 온전한 상태로 남아 있었다.

1985년 당서기장에 취임한 이후 고르바초프는 소련체제 전반에 걸친 재구조화와 개혁을 의미하는 페레스트로이카를 추진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사회주의적 발전의 ‘가속화와 심화’가 강조되던 초기의 추세는 이후 경제개혁과 경제개혁의 보다 안정적인 추진을 보장해 주는 조건들의 마련으로 변화해 갔다. 이와 관련하여 개방과 민주화도 중요한 개혁목표로 등장했다. 고르바초프는 집권초기 구체적인 개혁프로그램을 제시하기보다는 소련 사회주의 체제의 문제점들을 지적했다. 그러나 고르바초프의 시도

20 사회주의 시기 중의 경제개혁에 대해 보다 자세한 논의는 Н. В. Воротилов, *Экономическая самостоятельность предприятий в рыночном хозяйстве* (СПб, 1993), pp. 16~27; С. Н. Максимов, *Перестройка и проблемы хозяйственных реформ* (СПб: Издательство СПбГУ, 1992) 참조.

와 결부되어 변화에 대한 대중적 지지는 확산되었고, 고르바초프의 권력도 초기에 비해서 안정화 추세에 접어들자 고르바초프는 보수파의 저항이 비교적 작은 부분부터 개혁조치들을 취하기 시작했다.

고르바초프 경제개혁의 목표는 과도한 중앙집중화를 완화하고 생산과 노동자, 소비자들에 대한 자극체계로서 화폐와 가격이 작동할 수 있는 시장을 형성하는 것, 그리고 계획의 효율성을 유지하는 것이었다. 고르바초프의 개혁은 시장거래의 합법화와 성장, 사적 혹은 협동조합을 통한 거래의 증가, 생산단위에 대한 권위 부여, 그리고 기업운영에 있어서 기업의 자율성을 확대시키는 것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²¹ 그러나 기본적으로 고르바초프의 개혁은 계획경제의 기본적인 틀 내에서 효율성을 증가시키는 것이었기 때문에 국가의 계획기구와 각 부의 기능을 축소하면서도 중앙집중적인 계획경제의 중요 부분들이 그대로 유지되었다. 시장이 투자의 방향과 비율을 결정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가격결정도 대부분 행정-명령경제체제에 의해서 유지되었다. 또한 기업의 파산과 노동자의 해고는 노동조합과 위원회의 동의없이 이루어질 수 없었다. 이와 같은 요인들은 구체제의 유산들을 제거하려는 고르바초프의 개혁에 부정적으로 작용했다.

21 David Lane, *Soviet Society under Perestroika* (Boston: Unwin Hyman, 1990), p. 38. 고르바초프의 개혁프로그램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С. Н. Максимов, *Перестройка и проблемы хозяйственных реформ* (СПб: Издательство СПбГУ, 1992), pp. 141~182; A. Aslund, *Gorbachev's Struggle for Economic Reform* (Ithaca, 1991); David A. Dyker, *Restructuring the Soviet Economy* (Routledge, 1991), pp. 79~102; Martin McCauley eds., *Gorbachev and Perestroika* (New York: St. Martin's Press, 1989); 폴 그레고리·로버트 스튜어트, 한중만 외 역, 러시아 소련 독립국가 연합 경제의 구조와 전망 (서울: 열린책들, 1992), pp. 576~600.

고르바초프 정부는 집권 이후 2년동안 몇 가지 점진적 경제개혁조치들을 취했다.²² 첫 번째는 경제에 대한 중앙집중적인 행정체계를 재조직하는 일이었다. 이에 따라서 각 부서들은 통합되거나 실질적인 효율성을 높이도록 재구성되었다. 예를 들어 다섯개의 농업관련 부들이 하나로 통합되었으며, 유사한 조치들이 국가의 경제관리 조직들에 대해서 행해졌다. 두 번째 조치들은 기업과 지역에 주도권을 부여하는 것과 관계가 있었다. 기업재무관리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조치들이 취해졌다. 또한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농민들이 계약체계에 따라서 일정부분을 국가에 공급한 다음 나머지를 시장에 팔 수 있게 되었다. 25개 기업과 부서들이 시장의 원리에 기초해서 해외무역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들을 얻었다. 세 번째 조치들은 소유권을 보다 다양한 형태로 바꾸는 일이었다. 사적인 개인기업과 협동조합들이 허용되었고, 외국자본과 합작기업의 설립도 가능해졌다. 그러나 이와 같은 조치들은 완전하지 못한 부분적인 것이었으며 경제체제를 의미있는 수준까지 변화시키지는 못했다. 고르바초프도 이를 잘 알고 있었고, 따라서 보다 적극적인 경제개혁의 필요성을 느꼈다.

1987년 이전까지는 고르바초프가 개혁에 대해서 다양한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구체적인 개혁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다.²³ 이와 같은 초기의 개혁조치들의 수준을 넘어 경제개혁이 보다 본격적으로 추진된 것은 1987년 당 중앙위원회 전체회의를 전후해서였으며, 여기에서 고르바초프는 구체적인 계획들

²² Tatsuo Kaneda, "Gorvachev's Economic Reform," Peter Juviler, Hiroshi Kimura eds., *Gorvachev's Reform* (Aldine De Gruyter, 1988), p. 84.

²³ 폴 그레고리·로버트 스투어트, 러시아 소련 독립국가연합 경제의 구조와 전망, pp. 578~579.

을 발표했다.²⁴ 1987년 당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시된 고르바초프의 경제개혁의 주요 내용은 독립채산제를 포함하는 기업의 자율성 확대, 경제운영에 있어서 중앙집권적 통제체제의 전면적인 개혁, 가격·금융제도 개혁, 새로운 조직구조 형성, 그리고 민주적 관리체제 형성 등이었다.²⁵ 이를 위해서 기업이 국가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제공해야하는 계획할당량을 줄여 기업지배인들의 자율성의 여지를 확대시켜 주는 한편 적자기업의 도산을 인정하는 ‘국영기업법’을 발효시켜 기업경영의 책임성을 제고시켰다. 또한 ‘협동조합법’과 ‘개인영업법’을 통해서 소유권의 다양화를 법제화했으며,²⁶ ‘합영기업법’은 외국기업과의 합작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그러나 고르바초프의 구체적인 개혁안에도 불구하고 경제상태는 개선되지 못했다. 새로운 조치들에 익숙하지 못한 소련경제는 상당한 혼란을 겪었고, 물자부족상태는 개선

24 1987년 6월 25일과 26일에 열린 당 중앙위원회 전체회의는 당시 경제상황에 대한 고르바초프의 비판을 받아들였다. 전체회의는 그 동안의 경제개혁의 결과가 ‘부분적이고 미미’했으며, 따라서 경제체제는 아직도 비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진부한 계획과 행정체제에 의해서 지도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따라서 전체회의는 ‘경제관리의 보다 효율적이고 유연성있는 체계’의 형성을 위한 ‘급진적 개혁’을 요구했으며, 이를 위한 조치들을 채택했다. Tatsuo Kaneda, “Gorbachev’s Economic Reform,” p. 85.

25 A. Aslund, *Gorbachev’s Struggle for Economic Reform* (Ithaca, 1991), pp. 34~35.

26 고르바초프의 개혁은 산업에 대한 정부의 각 부서들의 힘을 약화시키는 것인 동시에 시장관계를 증진시키고 소유권관계의 다양화를 수반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사적거래에 대한 권리들이 개인들과 ‘협동조합’에 허용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권리가 허용되는 부문들은 세밀하게 규정되었으며, 고용노동이 금지되었기 때문에 개혁에 의해서 자극되는 새로운 경제활동은 가족단위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경향을 보였다. 협동적 형태의 소유권은 1988년까지 19,539개였으며 245,700명이 종사하고 있었다. 협동조합 장려정책이 시행된 이후인 1989년 4월의 경우 협동조합부분은 99,330개로 늘어났으며 1백 9십만 명 가량이 종사했으며, 이 수치는 1989년 여름 약 3백만 명에 이르렀다. David Lane, *Soviet Society under Perestroika*, pp. 38~39.

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인플레이션의 조짐들이 나타났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고르바초프는 1990년 7월의 28차 당대회 이후 전면적인 경제개혁 내용을 포함하는 개혁안을 만들도록 지시했다. 샬탈린개혁안²⁷으로 불리는 이 개혁안은 시장경제체제로 이행하는 구체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었으며, 이전에 비해서 매우 급진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샬탈린안을 대폭 수용한 고르바초프의 개혁안은 최고인민회의에서 채택되지 못했으며, 최고회의는 대통령안, 샬탈린안, 르이지코프총리체제가 만든 정부안을 고려하여 타협안을 만들도록 했다. 그 결과 야간베기안을 의장으로하는 ‘시장경제 이행대책 평가위원회’가 만들어 졌고, 동위원회가 작성한 안을 고르바초프가 받아들여 최종적으로 최고회의에서 채택되었다.²⁸ 그러나 최종안은 실질적으로 정부의 반대를 고려했기 때문에 개혁요소가 샬탈린안에 비해서 상당히 약화된 것이었고, 따라서 1년 후 권력을 상실하게 될 고르바초프로

27 500일 계획이 직접적으로 채택되지는 않았으나, 이 계획은 개혁주의자들의 개혁에 대한 급진적인 사고를 나타내고 있다. 샬탈린, 야블린스끼, 삐뜨라꼬프등 개혁파 경제학자들이 공동작성한 500일 계획안은 4단계로 나누어져 있었다. 1단계는 특별조치프로그램(1990. 10. 1~1991년 초의 100일간), 2단계는 가격자유화와 엄격한 예산제약, 3단계는 시장안정화, 4단계는 약진의 시작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500일간의 조치들을 통해서 급속한 시장경제로의 전환의 기초를 완성한다는 것이었다. Yablinsky G., Fedorov, B. 1991, *500 Days Program*, 한중만 역, 소련의 시장경제로의 이행 (서울: 열린책들, 1991) 참조.

28 최종안은 약 2년의 기간과 4단계를 거쳐 시장경제체제를 형성한다는 계획을 담고 있었다. 1단계의 주요 목표는 재정적자 축소, 토지개혁, 대외경제 안정화 등의 추진이었다. 2단계는 긴축재정과 중소기업의 민영화를 실시하며, 1/3은 국가의 가격통제를 유지하면서 단계적으로 가격을 자유화하는 조치들을 포함했다. 3단계에서는 시장형성을 목표로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촉진하며, 마지막으로 4단계에서는 경제독점 금지, 루블화의 대환성 부여, 외국자본 우대조치 등을 시행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서재진 외, 사회주의 개혁개방 사례 비교연구 , pp. 148~154.

서는 전면적이고, 급진적인 경제개혁을 단행할 마지막 기회를 놓치는 것을 의미했다.

이와 같은 개혁안들의 작성과 시행에도 불구하고 소련경제는 개선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고르바초프가 경제개혁을 구체화한 1987년 이후부터 실질적으로 고르바초프가 권력을 상실한 1991년 말까지의 경제지표들은 악화추세를 나타내고 있었다. GDP는 1988년 5.5%에서 1991년 -13%로 하락했으며, 자본축적율도 1988년 0.9%에서 1991년 -23%로 급락했다. 반면 인플레이션은 1988년 11%에서 1991년 128%로 증가하여²⁹ 이후의 초인플레이션 시대를 예고하고 있었다.³⁰ 또한 이와 같은 추세속에서 고르바초프는 샤탈린안이 거부된 1990년 10월 이후 권력을 상실한 1991년 말까지 보수파들의 저항으로부터도 자유롭지 못했다. 고르바초프의 경제개혁은 70여 년을 경과한 소련체제의 급진적인 변화를 위한 토양을 마련했고, 이후의 시장경제체제로의 이행을 위한 전 단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결국 고르바초프의 경제개혁은 국민들로부터 인정받을 만큼의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지 못한 채 1991년 8월의 쿠데타를 계기로 끝나고 말았다. 보다 적극적인 개혁을 요구했던 엘친의 급부상과 소연방의 해체는 소련체제의 공식적인 종말을 의미했다. 소연방이 해체된 1991년 12월 고르바초프는 사임했고, 이제 개혁은 공식적으로는 독립된 각 공화국들의 책임하에 놓여졌다.

²⁹ 인플레이션은 1990년까지 비교적 효과적으로 억제되어 왔으나 1991년 4월의 부분적인 가격개혁 이후 급속히 악화되었다.

³⁰ Грасильщиков, В. А., и др., *Модернизация: Зарубежный опыт и Россия* (Москва: Агентство Информат, 1994), pp. 81~83.

나. 엘친체제의 경제체제전환

엘친은 1991년 12월 28일 모스크바에서 열린 러시아 연방 인민 대표회의에서 행한 연설에서 이전의 페레스트로이카와는 다른 급진적 경제개혁의 의도를 나타냈다.³¹ 또한 91년 중에 이후 경제개혁을 주도하게 될 가이다르³² 경제팀에 의해서 경제개혁정책의 골격이 준비되고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1992년 초에 시작된 러시아의 개혁은 90%에 이르는 품목들의 가격통제 해제, 화폐의 평가절하, 그리고 GDP의 31%인 국가재정 적자를 1992년 1/4분기 중 1.5%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것을 포함하고 있었다. 러시아는 1992년 1월의 가격자유화를 시작으로 거시경제의 안정화와 경제구조개혁 등의 급진적 경제개혁을 시작하게 된다.³³

엘친의 경제개혁 진영은 러시아에 시장경제체제를 도입하기 위한 급진적인 개혁정책을 제시했다. 이들의 판단은 급진적인 자

31 엘친은 이 연설에서 다소 불분명한 형태이지만 향후 추진하게 될 급진적 경제개혁의 기본구도를 언급했다. “... 우리는 이제 경제의 자유를 회복해야 합니다. 기업가와 기업의 자유를 저해하는 모든 장애물들을 제거하고, 사람들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자신들이 얻은 결과들을 향유하게 해야 하며, 관료주의의 통제로부터 자유롭게 해야 합니다 ... 개혁은 몇 가지 방향으로 역동적으로 동시에 진행될 것이며, 복합적인 것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경제안정화입니다. 이를 위해서 긴축적인 통화와 재정, 신용정책이 실시될 것이며, 세금제도의 개혁과 루블화를 강화시킬 것입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처방은 가격을 자유화하는 것입니다. 가격자유화 없는 시장은 쓸모 없는 것에 불과합니다. 두 번째는 사유화로서 이는 강한 사유부문을 지닌 건강한 혼합경제를 의미합니다. ...” FBIS, Soviet Union, 29. 10. 1991, pp. 46~48.

32 시장경제에 대해서 강한 신념을 가진 가이다르는 엘친의 집권과 함께 총리가 되어 초기에 실시된 급진적 개혁정책의 실시를 주도했다.

33 페레스트로이카 이후의 지속적인 경제의 침체는 러시아인들에게 보다 적극적인 개혁의 필요성을 느끼게 하고 있었으며, 1991년의 쿠데타로 인한 강경 보수파들의 몰락은 엘친의 개혁진영에 대한 정치적 저항세력의 일시적인 소멸을 의미했다. 이와 같은 조건을 바탕으로 1992년 초 엘친 진영은 별다른 어려움 없이 급진적 경제개혁정책을 실시할 수 있었다.

유화정책의 시행만이 시장형성의 지름길이라는 것이었다. 따라서 가격자유화는 재정안정화정책과 함께 가이다르 경제개혁정책의 근간이었다.³⁴ 가격자유화는 우유와 빵 등의 필수식품, 그리고 에너지와 같은 몇 가지 중요 품목들을 제외한 분야에서 전면적으로 그리고 갑자기 단행되었다. 1992년 3월 이후에는 비록 반독점위원회의 결정에 의해서 몇몇 부분에 대한 가격통제가 지속되었지만 나머지 대부분의 분야에서의 가격통제가 해제되었다. 이는 러시아인들이 이전의 체제에서는 경험해보지 못한 전혀 새로운 경제상황의 전개였으며, 급격한 물가상승 국면이 이어졌다. 가격자유화 시행 직후 인플레이션은 245%에 달했다. 1992년 여름 이후 1994년의 겨울까지 인플레이션은 월 평균 20%를 넘었다. 따라서 1995년 인플레이션이 월 10% 이하를 나타내기 시작하여, 이후 진정국면에 접어들 때까지 러시아인들은 초인플레이션 상황에 놓여졌다.³⁵ 또한 1992년 1월부터 상업활동의 자유화조치들이 발표되어 적어도 형식적으로는 모든 사람들이 상업활동의 자유를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대외무역의 자유화 속도는 이보다 늦어졌다. 그것은 아직 부분적인 가격통제(특히 에너지)가 유지되고 있었기 때문에 완전한 무역의 자유화는 국내 자원분배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자유화조치들은 안정화정책에 의해서 균형을 잡도록 되어 있었다. 안정화정책의 주요 방법으로는 재정과 금융정책을 긴축적

³⁴ 가이다르의 자유화정책에 대해서는 Yegor Gaidar & Karl Otto Pohl, *Russian Reform/ International Money* (Cambridge: The MIT Press, 1995), 2장 “Liberalization” 참조.

³⁵ J. H. Cochrane and B. A. Ickes, “Macroeconomics in Russia, E. D. Lazear,” *Economic Transition in Eastern Europe and Russia* (Hoover Institute Press, 1995), pp. 69~70.

으로 시행하는 것이었다. 재정적자의 해소를 위해 국방비와 기업의 손실을 만회해 주기 위한 보조금을 삭감하는 긴축재정정책이 중요하게 이용되었으며, 조세제도를 개혁하고 중앙은행의 금융정책도 엄격하게 운용했다.³⁶ 따라서 1992년 러시아개혁의 초기 몇 달간의 재정적자는 급격히 줄어들었다.³⁷ 그러나 이와 같은 상태는 오래 지속되지 않았다. 그 주요 이유는 구체제의 저항 때문이었다.³⁸ 가이다르는 1992년 5월 자신의 충격요법에서 후퇴했다. 1992년 후반부에 들어서 정부지출은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고, 재정상태의 개선속도도 둔화되었다.³⁹ 결과적으로 발생한 초인플레이

36 가이다르는 재정적자 축소를 위해서 두 가지 방법을 택했다. 첫째는 군사부문의 지출을 급격히 줄이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가이다르는 군사부문의 발주를 70% 감축시키기로 결정했다. 둘째는 보조금을 삭감하는 일이었다. 가이다르는 1991년 말 GDP의 15%에 달했던 소비자 가격의 안정을 위한 보조금을 절반으로 줄일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구조적인 산물이었던 보조금의 삭감은 타성에 젖어 있던 기업들에게 심각한 타격으로 작용할 수 있었으나 가이다르는 이를 유일한 선택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가이다르는 세수증대를 위해서 1992년 6월 2일 28%라는 높은 세율의 부가세를 도입했다. 또한 기업에 대한 저리의 용자를 제공하고 있던 중앙은행을 보다 긴축적으로 운영함으로써 통화량의 팽창을 막으려 시도했다. Yegor Gaidar & Karl Otto Pohl, *Russian Reform/ International Money*, pp. 29~35.

37 가이다르는 이를 다소 과장된 형태로 표현하고 있다. “재정상태의 개선은 매우 인상적이었다. 1992년 첫 번째 몇 달 동안의 재정적자 규모는 GDP의 20%에서 거의 0에 가까울 정도로 축소되었다.” *Ibid.*, p. 32.

38 이미 1992년 5월과 6월에 가이다르는 개혁을 초기의 형태로 장기간 지속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감지하기 시작했다. 개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은 순수한 경제적 요소들이라기보다는 정치적 성격이 강한 것들이었다. 경제개혁은 다양한 문제들을 발생시켰다. 군수품 조달물량을 삭감함으로써 발생하는 군산복합체들의 저항, 보조금 삭감에 대한 농업부문의 로비, 긴축통화정책과 세금인상에 대한 공업부문의 저항, 투자축소 문제, 예산지출의 지연으로 인한 예산상의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발생했다. 구체제의 저항에 있어서 공산주의세력이 지배적이었던 당시의 의회는 국유기업들의 주요 로비경로로 이용되었다. *Ibid.*, pp. 36~37.

39 1992년 2/4분기 중 재정적자는 GDP의 11%로, 3/4분기 중에는 15%로 늘어났으며, 통화관리의 균형도 잠식당했다. 1992년 6월까지 중앙은행의 화폐공급은 700억 루블이었으나 10월에는 4조 루블에 이르렀다. 인플레이션은 2000%

이선은 저축을 휴지조각으로 만들어 버렸고, 국민들의 개혁에 대한 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또한 국내외로부터의 투자를 약화시켰으며, 신용체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⁴⁰

1992년 여름 옐친의 개혁진영은 대규모의 사유화정책을 실시하기 시작했다. 물론 이전에도 사유화의 조치들이 없던 것은 아니었으나, 전체적인 분야를 포괄하고 있다는 점에서 1992년의 사유화는 새로운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⁴¹ 특히 1992년 10월에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바우처사유화(mass voucher program)가 실시되었다.⁴² 이와 같은 대중적인 사유화는 상당히 짧은 시간에 이루어졌다. 1994년 7월까지 모든 공업부문과 서비스산업의 70%가 사유화되었다. 그러나 러시아의 급속한 사유화는 의도했던 효과를 가져오지 못했다. 양적인 사유화의 성공은 질적인 측면에서 볼 때 상당한 문제점을 드러냈다. 사유화된 기업의 절반가량이 이윤을 내지 못했으며, 러시아 공업생산력의 50%가 감소했다. 또

에 이르렀고 따라서 가격통제 해제의 진행과정을 왜곡하고 약화시켰다. 거시경제의 안정화가 수반되지 않은 미시경제의 자유화는 효과를 나타내기 어려웠다. Wing Thye Woo, "The Art of Reforming Centrally Planned Economies: Comparing China, Poland, and Russia," pp. 277~278. 참조.

⁴⁰ T. Colton, *et al.*, "Five Years after the Collapse of the USSR," *Post-Soviet Affairs*, No. 13 (1997), p. 16.

⁴¹ 예를 들어 1990년 7월의 '소유권에 관한 법률'은 소유권을 사적 소유, 협동적 소유, 국가 소유로 구분하고 있었다. 또한 90년 6월의 '기업에 관한 법률'은 국가나 협동기업 뿐만 아니라 개인과 가족기업에 관한 의무와 권리를 명시하고 있었다. 1991년 6월의 '기업의 사유화와 탈 국유화의 기본원칙에 관한 법률'은 임대기업, 집체기업, 합작기업 등으로 전환하는 규정들을 담고 있었다. Morris Bornstein, "Russia's Mass Privatisation Programme," *Communist Economies & Economic Transformation*, Vol. 6, No. 4 (1994), pp. 421~422.

⁴² 바우처 사유화는 전 사회구성원들에게 일정정도의 금액(1인당 만루블)에 해당하는 바우처를 무상 발행하고 이를 이용해서 해당금액 만큼의 기업과 국유재산의 주식이나 소유권을 획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대중적 방식의 사유화이다.

한 국가소유체제의 해체는 경제의 범죄화를 촉진시키는 주요한 배경으로 작용했다.⁴³

따라서 1992년 초기 가이다르 경제팀의 자유화·안정화·사유화를 위한 급진적 개혁조치들은 의도했던 결과들을 얻지 못했다. 개혁효과가 가시화되지 않자 국민불만의 증폭을 배경으로 반대파들의 저항이 커지게 되었고, 결국 가이다르 총리체제는 개혁에 대해서 보다 온건한 입장을 가지고 있던 체르노메르딘⁴⁴체제로 교체되었다. 당시 옐친정부는 체르노메르딘을 급진적으로 진행되어온 개혁의 완급을 조정하는 ‘관리형’에 적합한 인물로 판단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가즈프롬’의 대표를 총리에 임명함으로써 거대 국유산업 등의 민영화에 반대하는 보수세력들의 저항을 어느 정도 무마시키려 했던 의도도 포함하고 있었다.⁴⁵

43 러시아 거대자본의 상당수가 지하경제와 투기 뇌물, 국가재산의 절취를 통해서 형성되었다. 러시아 내무부는 1993년 중반 4만 개의 기업이 범죄적 구조에 의해서 통제되거나 설립되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또한 사기업의 경우 70~80%가 범죄집단과 부패관료에게 상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vetlana Glinkina, “The Shadow Economy in Contemporary Russia,” *Russian Politics and Law*, Vol. 34, No. 2 (1996), pp. 56~61.

44 1995년부터 「우리집 러시아」당을 이끌었던 체르노메르딘은 경제관료의 길을 충실히 걸어온 인물이었으며, 개혁에 대해서 점진적인 입장을 취했다. 체르노메르딘은 1986~1990년 사이에 공산당 중앙위원회에 참여했으며 니콜라이 루지코프 정부에서 석유-가스산업 장관을 역임했다. 또한 야블린스키의 급진적인 시장경제체제 도입계획인 ‘500일 계획’에 반대했다. *Moscow News*, No. 35 (September 8~14, 1995). 총리 당시 체르노메르딘은 거대한 규모의 국영 에너지 회사인 ‘가즈프롬’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했었다.

45 조한범, “체제전환기 러시아의 정치구도,” 동북아, 제5집 (1997), p. 201. 1992년 말 구 사회주의 체제의 기업지배인들에 의해서 지배된 의회는 개혁추진세력인 가이다르 총리를 관료출신인 체르노메르딘으로 교체했다. 따라서 체르노메르딘 총리에게 중요한 것은 미래 러시아 시장경제의 주역이 될 소규모 자생적인 기업들보다는 구체제가 잉태한 자신들의 존재기반인 거대국유기업들이었다. 그가 취한 첫 번째 조치는 자신의 이끌고 있는 석유와 가스공업 부문에 200억불의 저리융자를 제공한 일이었다. 이와 같은 조치는 국가의 재정적자로 직결되는 일이었다. Wing Thyee Woo, “The Art of Reforming

체르노메르딘체제는 전반적으로는 시장경제를 지향하면서도 개혁정책의 집행은 완만하게 시행했다. 따라서 체르노메르딘 총리의 등장에 따라서 가이다르식의 급진적 개혁은 사실상 끝나게 되고, 오히려 일부 영역에서는 긴축기조를 완화시키는 조치들이 취해졌다. 산업부문들에 대한 정부대출이 증가하고, 국민들의 불만을 무마하기 위해서 임금인상과 같은 조치들이 취해졌다. 또한 러시아 정부는 대국민 선심용 공약들을 완수하기 위해서 화폐발행을 남발했다. 이는 안정화정책의 주요 수단으로 상정되었던 통화팽창 억제조치의 후퇴를 의미하는 것이었다.⁴⁶ 1993년 7월에는 화폐개혁이 단행되었으며, 8월에는 ‘개혁의 발전과 러시아 경제의 안정화안’을 채택하여 개혁을 지속하기 위한 조치가 취해졌다. 이 안은 경제개혁을 위한 방법으로 ①국영 및 지방자치체소유 기업의 사유화, ②방위산업 채권발행의 조건 변경, ③자원의 국가분배체제, 예비금 적립, 국가주문 및 지정가격의 폐지, ④시장구조 및 운영원리에 입각한 생산기자재 판매시장의 형성, ⑤독점의 폐지와 자본주의 방식에 따른 상품의 자유판매, ⑥엄격한 금융정책, ⑦인플레이션에 영향받지 않는 항구적인 세원확보, ⑧대외경제활동의 자유화와 개방, ⑨가격의 자유화 등을 제시했다.⁴⁷ 1994년 7

Centrally Planned Economies: Comparing China, Poland, and Russia,” pp. 288~290.

46 “1992~1993년간 정부는 중앙은행의 가장 큰 채무자로 전락했다. 정부가 발행한 단기국가 채권은 예산 적자의 2%만을 충당했고, 나머지는 중앙은행의 특혜 대출에 의존했다. 또한 1992년 1.5조 루블이던 신규통화 발행이 1993년에 10.1조 루블로 증가했으며, 총통화량에 대한 비율도 24%에서 37%로 늘어났다. 재정체제의 붕괴, 중앙과 지방의 예산전쟁, 지불위기, 부당한 화폐발행이 모든 화폐유통은 국가의 통제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경제부, “러시아의 사회·경제개혁: 현 상황과 새로운 접근법,” 중소기업 (1994 여름호), p. 256.

47 “1991~1993년도 러시아 경제개혁의 기본방향과 결과,” 러시아연구, No. 2 (서

월에는 제2차 사유화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내부자 사유화(insider privatization)의 문제점들을 해소하려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경제의 전반적인 상태는 개선되지 못했다.⁴⁸

러시아 정부는 1995년 3월 새로운 3개년 경제개혁 프로그램을 확정했는데 거시경제의 안정화와 투자촉진, 그리고 생산회복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었다. 이것은 러시아 정부의 중기 경제정책의 기본방향을 밝히는 것으로서, 1992년 가이다르 총리내각의 급진적인 경제개혁 프로그램, 1993년 말 긴축완화 프로그램 이후의 세 번째 개혁 프로그램이었다. 이는 1993년의 경제개혁 프로그램이 재정안정화에 기여하지 못했고, 결국 거시경제 안정화를 위해서는 긴축재정정책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기초한 것이었다.⁴⁹

출: 대륙연구소, 1994), pp. 181~182. 이와 같은 체르노메르딘의 경제정책안은 3단계로 이루어져 있었다. 1단계는 1994년 상반기까지로 가격통제의 범위를 GDP의 3~5%로 축소, 국가구매는 20%선으로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했다. 또한 재정적자도 GDP의 8~10%로, 인플레이션은 월 5~7% 수준으로 억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 안정기인 2단계는 1994년 하반기부터 1995년까지이며 국민의 생활수준 향상과 대규모 사유화의 주요 목표 달성, 효율적인 금융제도의 도입 등이 목표로 상정되었다. 그리고 1996년부터 시작되는 3단계는 성장기로 잡혀 있었다. 이창제, “러시아 경제체제전환 시도에 대한 평가,” 러시아 새질서의 모색 (서울: 열린책들, 1994), p. 121.

48 1994년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경제부의 공동보고서는 1991~1993년간의 개혁이 실패로 귀결되었음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첫째, 거시경제 안정화 정책은 실패했다. 상정된 개혁의 목적과 정부의 예측 중 어느 하나도 이루지 못했다. 둘째, 경제붕괴로 연결되는 경향이 생겨나 강화되어 가고 있다. 셋째, 안정화정책이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경제개혁의 선택노선 및 그 우선순위를 바꾸지 않고 있으며, 여전히 가격자유화와 재정안정정책을 중시하고 있다. 넷째, 러시아의 사회·경제개혁을 지속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경제부, “러시아의 사회·경제개혁: 현 상황과 새로운 접근법,” pp. 253~254.

49 이 프로그램은 IMF로부터의 차관도입(차관은 인플레이션의 유발없이 러시아의 재정적자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었기 때문에 안정화정책에 매우 중요한 방법이었다), 민간투자촉진, 투기성 자금의 산업자본화, 세금제도의 간소화방안 등을 담고 있었다. 이철원, “러시아의 최근 경제현황,” 지역경제 (1995. 5), pp. 87~88.

1996년 러시아의 경제개혁은 다소간의 교착상태에 빠졌다. 그 이유는 6월에 실시된 대통령선거가 개혁정책의 집행에 영향을 미쳤으며, 정부도 분열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산업분야의 이익집단들은 보호주의 무역과 국가보조금 지급을 원한 반면, 금융분야의 이익집단들은 보다 적극적인 자유화를 원했다. 따라서 개혁의 효율성보다는 재선을 위한 대국민 선심성 공약이 우선시 되었고, 산업분야의 이익집단들과 금융분야의 이익집단들의 긴장관계는 일관성있는 경제개혁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⁵⁰

경제개혁조치들로 인해 1995년의 경우 러시아 GDP의 3/5 이상⁵¹ 혹은 55%⁵²가 비국유부문으로부터 산출되었다. 또한 1995년 말과 1996년 초에 걸쳐서 러시아가 체제전환기에 발생하는 경기하강 국면의 마지막 단계에 근접했으며, 이후 상승곡선을 그릴 것이라는 예측을 가능케 하는 징후들이 나타났다. 빈곤선 이하의 생활수준에 있는 사람들이 33%에서 25% 이하로 감소했다. 1991년부터 1994년까지 매년 -12%에서 -19%까지 하락했던 GDP의 하락추세도 1996년에는 전년대비 -3%로 추산되는 등 점차 안정 추세를 나타냈으며, 초인플레이션도 안정되었다. 또한 루블화와 경화와의 교환비율이 과거와 달리 안정적인 추세를 유지했다. 1996년 1월에서 8월까지 러시아인들이 실제로 소비할 수 있는 수입은 12%가 증가했으나 실제 소비는 이보다 작았으며, 이는 러시아에서 저축이 증가하고 있음을 의미했다. 1995년과 1996년 러시아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은 매우 긴축적이었으며, 인플레이션은

⁵⁰ Peter Rutland, "Another Lost Year for the Economy," *Transition*, No. 7 (February, 1997), pp. 78~81 참조.

⁵¹ 러시아측의 통계.

⁵² European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의 통계.

매월 1% 이하로 유지되었다. 이는 IMF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있는 수치였다.⁵³ 따라서 1992년 연 2,510%를 기록하였던 물가상승률은 1996년에는 21.8% 그리고 1997년 상반기에는 8.6%로 크게 안정되었다. 1992년 개혁정책 실시 이후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여왔던 러시아의 산업생산도 1997년 상반기에는 증가세로 반전되는 징후들을 나타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러시아 경제개혁의 긍정적인 측면들은 동시에 부정적 요인들을 내포한 것이었다.⁵⁴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비경제적인 문제들은 정치적 불안과 범죄, 그리고 부패 등을 들 수 있으며, 법제도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러시아경제의 국제적인 신용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해외로부터의 투자를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따라서 1995년의 경우 해외로부터의 투자는 총투자의 2.8%에 그쳤다. 경제적인 문제들은 보다 다양한 양상을 나타낸다. 첫째로 러시아의 GDP는 1989년에서 1996년 중반까지 약 48%가 하락했다. 둘째, 인플레이션이 아직도 높다는 점이다. 1996년 중반기의 소비자 가격지수는 1995년 중반에 비해서 50% 정도 높았다. 셋째, 대규모 사유화(large-scale privatization)가 너무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다. 따라서 1994년 말까지 러시아의 공업부문 노동자의 83%가 정부가 일부의 소유권만을 가지고 있거나 전혀 소유권을 가지

⁵³ T. Colton, *et al.*, "Five Years after the Collapse of the USSR," pp. 14~17.

⁵⁴ 러시아의 체제전환은 동유럽 국가들이나 슬로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보다 성공적이지 못했다. 그러나 불가리아, 우크라이나, 백러시아, 아제르바이잔, 그루지아, 기타 아시아의 CIS권 국가들에 비해서 러시아의 경제체제개혁은 성공적인 편이었다. P. Hanson, "What Sort of Capitalism in Russia," *Communist Economies & Economic Transformation*, Vol. 9, No. 1 (1997), pp. 27~29.

고 있지 않은 기업에 속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유화가 의도했던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었다.⁵⁵ 넷째, 산업부문간의 구성이 급격하게 변화했다. 따라서 생산부문인 농업과 공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 이상 감소한 반면, 운송과 커뮤니케이션, 국내거래, 기타 서비스부문의 비율은 급증했다.⁵⁶ 다섯째, 생산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구조적인 변화와 실업률은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이는 실질임금의 하향화와 관계가 있다. 마지막으로, 범죄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경제범죄가 급증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관료들의 부패는 만성화되어 있다. 결국 이와 같은 문제점들은 1997년 호전의 기미를 보이던 러시아가 1998년의 경제위기에 직면하는 원인으로 작용했다.

55 사유화 실시 이후 대다수의 기업들은 해당기업의 노동자와 지배인들에게 주식의 51%를 소유하게 허용하는 안을 선택했다. 이는 기업사유화의 지배적인 형태가 내부자 사유화였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명목상 많은 주식을 소유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의사결정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했으며, 통제력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지배인들에 의해서 행사되었다. 이와 같은 내부자 사유화는 사유화의 중요한 목표인 경제구조 재편과 외국자본의 유치에 부정적으로 작용했다. 새롭게 형성된 시장압력하에서 상당수 기업의 경영진들이 신기술과 자본의 도입을 위해서 외부로 눈을 돌렸으며, 노동자와 기업지배인들의 공동소유형태 비율도 작아지는 추세를 나타냈다. 그러나 1996년 초까지도 러시아의 대다수 기업들은 내부자사유화로 인한 부정적 결과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있다. T. Colton, *et al.*, "Five Years after the Collapse of the USSR," p. 17.

56 이와 같은 점들은 러시아에 형성되고 있는 시장이 상당 정도 기형성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도 증명되고 있다. 러시아의 경우 개혁초기부터 매점 매석과 중개차익을 노리는 경제행위가 현저하게 나타났으며, 결과적으로 생산부문의 잠재력을 잠식했다. 예를 들어서 1992년 6월에서 1993년 4월간의 은행대출실적에 따르면 생산부문에 대한 투자는 감소하고 있는 반면, 중간거래를 위한 대출은 45%에서 75%까지 급증하는 추세를 나타냈다. Vladimir Kollantai, "Social Aspects of Economic Reform in Russia," *Eastern Europe in Crisis and Way Out* (London: Macmillan, 1995), p. 389.

<표 III-1> 주요 거시경제지표의 변동추이(1992~1997년)⁵⁷

(연간성장률 %)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GDP	-14	-9	-13	-4	-5	0.4
공업생산	-18	-15	-20	-4	-4	1.7
농업생산	-8	-4.5	-7	-8	-8	0.1
소비자물가	2,500	840	230	131	21.8	11.0

체르노미르딘을 계승한 키리엔코 총리는 러시아 금융위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날 수 밖에 없었다. 키리엔코 총리하에 러시아 경제개혁의 총체적 문제점에 기인, 결국 1998년 8월 17일 디폴트와 루블화 평가절하를 선언하게 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러시아는 심각한 금융위기 상황에 처했다. 은행의 절반이 도산했으며, 루블화의 가치는 4분의 1로 절하되었다. 키리엔코 총리하 러시아 국내 총생산은 -3.1%를 기록했으며, 결과적으로 키리엔코는 책임을 지고 해임되었다.

당시 러시아의 경제위기는 4단계로 설명될 수 있다.⁵⁸ 1단계는 1997년 10월에 발생했다. 동아시아 금융위기가 심화되자, 러시아에 있어서도 해외투자자들이 주식을 대량 매각함으로써 러시아 기업유가증권시장이 동요했으며, 달러화에 대한 과잉수요가 발생했으며, 이는 루블환율을 불안정하게 만들었다. 러시아 정부는 시장의 안정과 루블화 가치회복을 위해 금과 외환을 매각했으나 위기는 진정되지 않았다. 위기의 2단계는 아시아 금융위기 영향의

⁵⁷ 러시아 국가통계위원회 및 러시아 중앙은행 발표자료.

⁵⁸ Dmitriy Juvakin, "Financial Crisis in Russia in 1998," unpublished paper, 박제훈, 러시아 체제전환과 자본주의 발전에 관한 연구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0), pp. 126~128 재인용.

지속과 루블화 가치하락에 대한 우려의 지속 및 러시아 정부의 강력한 국내통화안정정책 등에 기인해 발생했다. 위기는 1998년 1월 6일에서 12일 사이에 러시아 기업 유가증권지수(AK&M)가 23% 하락하면서 발생했으며, 1월 25일 추가폭락으로 심화되었다. 위기의 3단계는 1998년 5월 후반에서 6월 초에 걸쳐 진행되었다. 광부파업과 루블화의 가치하락, RAO EES 전기회사의 외국인 소유제한조치, Fosneft 석유회사 사유화 경매 실패 및 전반적 경기 악화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였다. 이에 따라 러시아 금융시장에 대한 신뢰가 하락했으며, 외국의 투자자들이 투자를 철회하기 시작했다. 위기의 최고조인 4단계는 1998년 8월 17일에 발생했다. 러시아 정부는 상황불능을 선언했으며, 따라서 러시아 금융시스템이 심각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당시 러시아 중앙은행은 환율방어를 위해 38억 달러를 소모한 상태였으며, 물가상승과 아울러 러시아 금융시스템의 붕괴조짐이 나타났다. 따라서 물물거래 및 현금거래가 확산되는 추세가 나타났다. 또한 지방정부는 연방정부에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와 같은 러시아 경제위기는 아시아 금융위기의 여파라는 상황적 요인과 아울러 러시아 경제체제개혁과정의 전반적 문제점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였다.

키리엔코에 이어 임명된 프리마코프 총리는 러시아를 금융위기 상황에서 구해내 회생시키는데 일정정도 성공할 수 있었다. 프리마코프는 러시아의 가장 큰 세수원이었던 석유재벌의 탈세를 막았으며, 외화수익의 일정부분을 루블화로 교환해야 하는 강제규정을 신설, 루블화 안정에 기여했다. 동시에 경제 범죄와 관료 부패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나서 프리마코프 총리시대의 러

시아 GDP는 약 4% 성장하는 추세를 보였다. 스테파신 총리는 1999년 5월 취임하였으나 8월에 해임되어 특징적인 경제정책을 펼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했다.

다. 푸틴체제와 경제안정

경제적인 측면에서 러시아는 1998년 금융·외환위기에서 예상보다 빠른 추세로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2000년 상반기에도 7%를 상회하는 경제성장률을 나타냈다. 1999년 이후 일정기간 지속된 고유가 상황은 러시아의 경상수지를 개선시켰으며, 러시아의 외채위기 가능성은 상당부분 감소했다. 따라서 푸틴체제하 러시아는 초기의 급진적 개혁의 충격이 어느정도 흡수된 상태로 평가될 수 있으나,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잠재적 문제들이 완전히 해소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아직 최종적 평가는 유보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전반적으로 초기의 급진적 개혁조치 이후 러시아에 있어 경제체제의 근본적 전환을 야기하는 정책의 구사보다는 갈지자형의 조치들이 반복적으로 시행되어, 점진적 변화를 보인 경향이 컸다. 2000년 푸틴 대통령체제의 등장으로 러시아는 과거에 비해 정치적 안정성이 보다 강화되었다. 푸틴 대통령은 국민적 지지를 바탕으로 러시아 정국의 주도권을 확보했으며, 의회내에서도 상당한 지지세력을 확보하고 있다.

엘친에 의해 파격적으로 발탁된 푸틴은 ‘엘친의 총복’이라는 꼬리표를 떼지 못한채 총리시절 경제문제보다는 체첸과의 전쟁 등 정치적 문제해결에 주력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프리마코프

전 총리의 경제정책의 영향으로 1999년 국내총생산은 3.2%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푸틴의 정치적 슬로건인 ‘강력한 러시아주의’는 시장의 자유를 제약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그러나 대중적 인기에 기인한 강력한 지도력의 추구는 러시아 경제의 혼란된 질서를 바로잡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푸틴은 단기적 대중적 인기몰이에 의한 집권이라는 초기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후 비교적 안정적인 집권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00년 8.5%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했으며, 따라서 1999년 금융위기 당시 IMF로부터 지원받은 2003년 만기의 구제금융 중 일부인 3억5천만 달러를 2001년 10월 조기 상환하는 자신감을 보였다. 이와 같은 성공의 상당한 원인은 푸틴 대통령에 의한 강도 높은 구조개혁에 있었다. 아래의 표는 외환위기 이후 러시아 경제의 안정화 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표 III-2> 외환위기 이후 러시아의 경제 지표⁵⁹

(단위: %, 억 달러)

	1999	2000	2001	2002	2003
실질 GDP성장률	6.4 %	10.0 %	5.1 %	4.7 %	7.3 %
공업생산 증가율	11.0 %	11.9 %	4.9 %	3.7 %	7.0 %
설비투자 증가율	5.3 %	17.4 %	10.0 %	2.6 %	12.5 %
소비자물가 상승률	37 %	20 %	19 %	15.1 %	12 %
정부 재정수지 (GDP 대비)	-1.11 %	1.54 %	3.01 %	1.5 %	1.6 %
수 출	756	1050	1019	1072	1344
수 입	395	449	538	610	748

⁵⁹ 러시아 국가통계위원회 및 러시아 중앙은행 발표자료 (2004).

푸틴은 집권 이후 러시아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던 경제관련 부패문제를 청산하지는 못했지만 일정정도 개선하는 데는 성공했다. 푸틴 대통령은 2001년 6월 부패한 기업인 중 한명으로 의심받던 가즈프롬의 최고경영자인 렘 비얀스케레프를 몰아내는 등 러시아의 주요 기업에서 부패문제를 상당부분 제거하는 데 성공했다. 동시에 개인 소득세율을 13%로 단일화하는 등 탈세 요인을 최소화했으며, 정부의 재정수입 확대와 지하경제 요소의 축소에 노력을 기울여 세수를 상당부분 확대하는데 성공했다. 푸틴 대통령은 세계경제 편입과정에도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를 통한 외국인 자본 유치로 원유 산업중심의 러시아 산업구조 개선을 도모하고 있다. 러시아의 에너지 산업은 전체 국내총생산의 16%를 차지하고 있어 원유가격 하락과 상승은 러시아 국내총생산 하락과 상승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와 같은 점에서 최근 고유가 시대의 도래는 러시아에 있어서 유리한 조건이며 따라서 외환보유고의 증가 및 외채의 감소로 귀결되고 있다.

<표 III-3> 러시아 외환보유고 및 외채규모 추이⁶⁰

(단위: 억 달러)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10
외환보유고	122.23	124.56	279.72	366.22	477.93	778
외채규모	1,857	1,771	1,583	1,504	1,521	1,654
GDP대비 %	58	92	61	49	41	·

60 위의 책.

푸틴 대통령체제하에서 나타나고 있는 상대적 경제안정은 아직 체제전환의 마무리와 성공에 기인한 것이라는 최종평가를 내릴 수는 없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시장체제 안착을 위한 경제제도의 내면화와 산업구조의 개편, 그리고 정치적 안정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점에서 러시아의 시장제도 도입과정은 아직 진행 중이라는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이다.

IV

탈 사회주의 체제 전환기 사회변화와 갈등구조

1. 사회변화

탈 사회주의전환과정은 다양한 사회적 변화를 수반하며, 이는 체제전환의 양상에 따라 차이를 보이게 된다. 발달된 사회주의 체제의 경험과 사회구조를 가진 러시아의 탈 사회주의 체제전환 과정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변화는 사회주의 저발전 상태에서 시장 체제로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 중국의 그것과 다를 수밖에 없다.

점진적 시장화전략을 선택한 중국의 사회변화는 발달된 사회주의 경험을 가진 국가들, 즉 소련과 동유럽의 경우와 다른 양상을 보이게 된다. 시장화과정에 들어서기 이전 중국의 경우 사회주의적 발전과 공업화의 수준은 낮은 단계에 머물러 있었으며, 이는 사회주의 근대화의 경험이 미약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중국의 경우 근대화의 특성들은 사회주의적 외피속에서 진행되는 시장화의 결과들로부터 영향을 받아왔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의 시장화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변화들은 자본주의적 근대화에 따른 사회적 변화의 특성들과 상당부분 유사한 모습을 보이게 된다. 고도성장에 따른 도시화, 핵가족화, 교육수준의 향상, 보건·의료수준의 향상, 소비생활의 향상 등 자본주의적 산업화에 따른 사회적 변화의 양상들이 중국에서도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소련은 발달된 사회주의 체제와 높은 수준의 사회주의 공업화 단계에 도달했었다는 점에서 중국과 본질적인 차이를 지니고 있다. 구소련의 해체와 더불어 시작된 러시아의 체제전환은 사회주의 근대화의 경험들을 다른 것들로 ‘대체’한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점에서 중국의 탈 사회주의 체제전환이 ‘건축’의 특성을 지닌다면, 러시아의 경우는 ‘재건축’의 특성을 지

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러시아는 사회주의 근대화의 경험을 시장화에 의한 새로운 특성으로 대체해야 했으며, 기존체제의 해체와 동시에 새로운 체제의 건설을 진행시켜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러시아의 경우 구체제의 해체과정에서 사회적 변화와 아울러 해체비용을 지불해야 했다는 점에서 저발전 사회주의 국가와 차이를 나타냈다. 러시아의 체제전환에 따른 사회적 변화 및 부정적 특성이 부각되어 나타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점에 기초한다. 구체제에서 형성된 수많은 특성들은 새로운 체제건설과정에서 변화와 새로운 적응을 요구받고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생활세계의 주인인 러시아인들의 일상적 삶의 근본적 변화를 요구하는 것과 다르지 않게 된다. 러시아의 사례는 시장경제체제로의 이행에 있어서 사회변화와 아울러 상당한 갈등요인들이 나타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⁶¹

탈 사회주의 체제전환기의 사회변화는 구체제에서 형성된 유제와 시장화의 결과 양방으로부터 모두 영향을 받는다. 러시아의 급진적 체제전환과정에도 불구하고 구체제에서부터 온존된 구조적 요인들은 지속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이는 혁명적 변화가 수반되지 않는 체제전환과정의 특징이었다. 사회주의의 몰락과 시장화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 시기의 유산들은 구엘리트층의 생존과 함께 온존되었으며, 시장경제로의 체제전환에 필요한 새로운 적응력들의 형성을 제약했다.

61 복고지향적 좌파세력과 민족주의, 파시즘, 사회적 혼돈과 불안, 노동자의 저항, 실업, 궁핍화, 인플레이션 등은 체제전환기 사회의 사회적 갈등을 형성·증폭시키는 요인들이다. A. Aslund, "Reform vs. 'Rent-Seeking' in Russia's Economic Transformation," *Transition*, Vol. 2, No. 2 (Jan 1996), pp. 12~13.

체제전환기의 몇 가지 상황적 특수성도 사회변화에 영향을 미쳤다. 첫째, 구체제의 해체과정에서 사회적 아노미가 발생했다는 점이다. 삶의 준거로 인식되었던 과거의 삶이 총체적으로 부정되는 과정에서 이를 대체할 새로운 가치가 창출되지 않는 모순적 상황은 사회구성원들을 불확실성 속으로 몰아 넣었고, 사회적 고립과 단절을 가속화했다. 둘째, 새로운 유산계급 형성과정은 정당한 ‘게임의 법칙’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었으며, 사회적 아노미 속에서의 경쟁은 규범과 가치를 무시한 ‘정글의 법칙’(brutal competition)이었다. 셋째, 사회주의 체제 내내 확고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사회통제가 갑자기 효력을 중지했다는 점이다. 외적인 통제력인 사법·경찰제도는 정당성을 상실한 채 사회통제기능을 상실해 갔으며, 사회통제의 최소원칙이라 할 수 있는 법체계는 그 자체가 존재이유를 상실한 사회주의 체제에서 형성되었다는 점에서 권위를 인정받을 수 없었다. 넷째, 시장화과정은 의도하지 않았던 부정적 결과들을 초래했다. 시장화와 개방화과정은 서구 사회의 발달된 시민문화의 유입보다는 부정적 향락문화와 일탈적 삶의 방식들을 먼저 유입시키고 말았다는 점이다. 서구의 수준 낮은 대중문화는 ‘수입단가’가 낮고, 자극적·선정적이라는 점에서 체제전환기 혼란을 겪고 있는 탈 사회주의 체제전환기 사회의 주민들에게 빠르게 접근할 수 있었다.⁶²

체제전환기 사회의 변화는 경제체제의 변화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나타났다. 특히 급진적 체제전환의 경우 경제구조의 변화가

⁶² Piotr Sztompka, “Civilizational Competence: A Prerequisite of Post-Communist <<http://april.ibpm.serpukhov.su/friends/education/audem95/Sztompka.html>>, p. 6.

특징적으로 나타났으며, 이 과정은 다양한 사회적 변화를 수반했다. 사회주의에서 가능했던 경제에 대한 국가의 통제는 급속히 약화되었지만 구체제의 특성이었던 독점화 경향은 약화되지 않았으며, 이익집단들에 의한 조합주의적 통제는 오히려 증폭되었다. 이익집단들에 의한 자원분배체제의 통제는 독점분야에 대한 자원의 특혜적 분배와 나머지 분야의 소외현상을 초래했다. 급진적 사유화과정에서 구체제 소유관계의 급격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이 과정에서 구체제의 지배세력들은 결정적 영향력을 행사했다. 이와 같은 전반적 상황은 경제의 지하경제화와 범죄화라는 지형과 밀접히 연관되어 발생했다. 자율적인 경제주체들의 형성을 목적으로 했던 사유화과정에 대한 구지배세력들의 개입은 일반주민들에게 기회의 박탈과 제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긍정적일 수 없었다. 탈 체제전환기의 경제체제의 재구조화와 이에 따른 구조적인 경기침체는 사회주의 복지체제의 전면적인 축소와 대량실업을 유발했으며, 사회해체와 범죄문제 등 다양한 차원에서 사회문제들을 발생시켰다.

시장경제로의 체제전환은 구체제의 해체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구체제의 평등주의적 복지체제에 안주하던 사람들과 기득권층들의 반발을 야기했다. 다른 점은 구기득권층들이 특권을 바탕으로 체제전환과정에서 유산계급으로 빠르게 변신했던 반면, 대다수 사회주의 일반노동자들은 하층으로의 궁핍화과정으로 강요당했다는 점이다. 사회주의 국가의존체제(state-dependent)와 관료적 분배체제는 직업의 안정성과 생산성에 관계없이 균등한 임금정책을 보장해주었으며, 사실상 실업의 위험은 존재하지 않았다.⁶³

⁶³ 국가의존체제와 관료적 분배체제는 사무직 노동자보다는 육체노동자에 유리

시장체제로의 전환은 국가의존적 특성에 안주하고 있던 사회주의 주민들이 불안정과 경쟁상태에 적응해야 하는 것을 의미했으며, 국가로부터 혜택을 받는 정도가 큰 집단일수록 시장화로부터 잃을 것이 많다는 점을 의미했다. 이와 같은 점에서 사회주의 체제에서 유리했거나, 특권적 지위를 향유했던 비숙련 노동자, 농민, 군산복합체의 숙련노동자들은 시장화에 보다 큰 반감을 가졌다.⁶⁴

사회주의에서 국가의존형 노동자들이 시장경제에 비판적인 입장을 나타나는 것은 사회주의 복지체제의 특성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사회주의 체제에서 개인들의 행위를 유도하는 구조적인 자극들이 존재했다. 명백한 강제와 이데올로기적인 자극이외에 사회복지제도는 개인들의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도구였다. 소련과 동구처럼 사회복지체제가 발달한 국가일수록 농업부분을 포함하는 거의 모든 산업, 전 구성원을 대상으로 복지체제를 갖추고 있었다. 탈 사회주의 체제전환과정은 이와 같은 사회주의 복지체제의 해체를 의미하며, 이는 기존 수혜계층의 기득권 상실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동시에 과거 경제외적관계와 사회보장제도에 의해서 보호받던 노동자, 농민들은 사회보장의 쇠퇴와 더불어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계층분화의 과정에 놓여야 했

했으며, 서비스부분보다 중화학공업부분의 노동자에게 유리했다. 또한 체제에 대한 일상적 적응과 순종이 특별한 기술과 자질, 교육, 기업가적 능력, 혁신지향성보다 유리하게 작용했다. 사회주의의 국가의존형 특성은 특권계층이었던 노멘클라투라와 피지배계층 모두에게서 나타났으며, 변화에 대한 저항과 혁신적인 동기화의 결여는 소련사회의 모든 계층과 집단의 특징적 현상이었다.

⁶⁴ Victor Zaslavsky, "Contemporary Russian Society and its Soviet legacy," Bruno Grancelli ed., *Social Change and Modernization* (Berlin, New York: Walter de Gruyter, 1995). pp. 49~55.

다. 체제전환 초기 사회적 하향화라는 조건에 놓인 노동자와 농민들에게 무차별적 시장화는 불공평한 과정으로 인식될 수 밖에 없었다.

2. 갈등구조 : 계급·계층구조의 재편

갈등은 인간의 사회에 존재하는 보편적 현상이며, 갈등은 인간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측면들을 포함한다. 적대감, 전쟁, 경쟁, 긴장, 모순, 투쟁, 불합의, 불일치, 논쟁, 폭력, 반대, 혁명 등은 모두 갈등적 요소들을 내포하는 개념들이라 할 수 있다.⁶⁵ 갈등은 계급과 조직 등 집단적인 형태를 지닐 수도 있고, 개인적 차원에서 양상을 지닐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싸움이 개인간의 갈등이라면, 혁명은 사회계급들간의 갈등형태의 하나가 된다. 이와 같은 갈등은 부정적 기능과 아울러 긍정적인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기도 한다.

탈 사회주의 체제전환은 생활세계의 근본적 지각변동과 아울러 다양한 이해관계의 상충을 낳는다는 점에서 다양한 사회적 변화와 사회갈등의 여지가 증가한다는 점이다. 특히 동질화 되어있던 계급·계층구조의 불평등 구조로의 전환은 사회의 각 구성원들의 이해관계를 직접적으로 재조정하는 과정을 수반한다는 점에서 갈등의 발생은 필연적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시장경제로의 체제전환은 러시아 사회에 필연적인 새로운 사회분화를 발생시킨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안정된 계층구조를 구성하고 있던 구소

⁶⁵ J. H. 터너·김진균 외 역, 사회학 이론의 구조 (서울: 한길사, 1983), p. 218.

련의 사회구조가 시장화에 따라 불평등 사회로 전환하는 과정은 구사회의 해체를 수반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갈등의 기초로 작용하게 된다.

시장체제로의 전환은 평등을 ‘주제’로 형성되었던 사회주의 계급·계층구조의 근본적 변화를 야기한다. 특히 집단적 소유권(국유 혹은 협동적 소유권)은 새로운 사적 소유구조로 전환되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새로운 기업가 집단의 탄생은 시장체제로의 전환에 있어서 필수적 과정이다. 그리고 이 과정은 복잡한 이해관계의 충돌과정을 수반하게 된다. 탈 사회주의 체제전환과정의 계급·계층구조의 변화에 대한 경험적 연구는 아직 많지 않으며, 따라서 일반이론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대체로 혁명적 변화가 수반되지 않은 체제전환에 있어서 구체제의 기득권층들이 신흥 부유층 및 기업가 형성에 있어서 친화력을 가지는 한편 지속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이 확인되고 있다.

기술관료적 연속성론(technocratic continuity thesis)과 권력변환론(power conversion thesis)은 사회주의와 체제전환기의 엘리트간의 연속성에 주목하고 있는 논의이다. ‘기술관료적 연속성론’(technocratic continuity thesis)은 사회주의 체제가 전문적인 기술관료집단을 형성했다는점에 주목한다.⁶⁶ 이 실용적인 새로운 엘리트들은 이행기에도 상당부분 효과적으로 적응한다는 것이다. ‘권력변환론’(power conversion thesis)은 새로운 엘리트가 구 엘리트와 별로 다르지 않다는 사실에 동의하지만, 사회주의 시기에 축적된 권력은 시장경제에서 높은 가치를 지닌 자산으로 변환된

⁶⁶ Erzsebet Szalai, *Gazdsasag es hatalom(Economy and Power)* (Budapest: Aula, 1990).

다는 점을 지적한다. 정치적 자본이 경제적 힘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⁶⁷ 따라서 관료들은 자신의 지위와 위치를 기반으로 국유재산의 획득과정을 유리하게 이끌어간다. 이들은 비공식적인 연결과 이행과정에서 나타나는 혼란된 상황을 이용해서 국유재산에 대한 자신들의 제한된 통제력을 유사 혹은 실질적인 소유권으로 전환시킨다.⁶⁸ 반면 엘리트의 비연속성에 주목하고 있는 부르조아지화 중단론(interrupted embourgeoisement theory) 혹은 구조 보상이론(a theory of structural compensation)⁶⁹과 같은 논의들이 있으며, 핵심적 논지는 구체제와 새로운 체제의 형성간에는 의미있는 상관관계를 찾기 힘들다는 것이다. 이들 논의는 엘리트들이 정치, 경제, 사회적 자본의 동원화의 중요성이 제한된 농촌사회에 대한 제한적 연구의 결과라는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⁷⁰ 이와 같은 탈 사회주의 체제전환기의 계급·계층구조의 변화에 대한 논의들은 전반적 사회변화를 대상으로 도출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일반적 이론으로 정립되기에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고 할

67 Jadwiga Staniszkis, *The Dynamics of Breakthrough in Eastern Europe: The Polish Experience* (Berkeley and Los Angele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1).

68 Akos Rona-Tas, "The First Shall Be Last? Entrepreneurship and Communist Cadres in the Transition from Socialism," *AJS*, Vol. 100, No. 1 (1994), pp. 41~47.

69 Victor Nee, "A Theory of Market Transition: From Redistribution to Markets in State Socialism," *ASR*, 54 (1989); Victor Nee, "Social Inequalities in Reforming State Socialism: Between Redistribution and Market," *ASR*, 56 (1991).

70 Szonja Szelenyi, "Social Inequality and Party Membership: Patterns of Recruitment into the Hungarian Worker's Party," *ASR* 52 (5), 1987; Ivan Szelenyi, *Socialist Entrepreneurs: Embourgeoisement in Rural Hungary* (Madison: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1988); Ivan Szelenyi & Szonja Szelenyi, "Az elit cirkulacioja? (The circulation of elite?)," *Kritika* 9 (1990).

것이다.

러시아의 경우 새로운 유산계급의 형성과정은 엘리트의 연속성을 강하게 보여주었다. 신흥 사기업가들이 주로 과거의 사회주의 사회의 지배계급에 해당하는 국가나 당기구의 특권계급(노멘클라투라)과 지하경제출신이기 때문이다. 노멘클라투라들은 자신들의 특권적 위치를 이용하여, 그리고 지하경제출신들은 금지되어있던 매점 매석이나 재판매 그리고 기타 범죄적 요소와의 결합을 통해서 부를 축적했고, 이들에 의해서 축적된 부는 개혁 이후 사회·경제적 혼란기에 신속하게 사기업 설립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⁷¹ 노멘클라투라와 지하경제출신 두 집단은 서로 독립된 범주라기 보다는 상호중첩되는 것이었다. 사회주의 시기에서부터 노멘클라투라들의 상당수가 지하경제와 관련을 맺고 있었으며, 체제전환기에도 이와 같은 경향은 약화되지 않았다. 사기업 설립에 있어서 경제적인 변수이외에 이들의 정치적·사회적 영향력 행사 역시 커다란 변수로 작용했으며, 이 과정에서 비합법적인 수단의 사용은 일반적이었다. 러시아 사기업가의 형성에 있어서 현 지배세력과의 연관관계 및 영향력은 중요한 변수로 작용했으며, 이는 정치세력과 새로운 유산계급에 대한 전반적 불신을

71 러시아의 경우 탈 사회주의 체제전환과정에서 구체제의 엘리트와 새롭게 형성된 엘리트간에는 강한 연속성을 지니고 있었다. 체제전환 초기인 1993년의 경우, 정치엘리트의 83.4%, 문화엘리트의 77.7%, 경제분야의 경우 국유부분 84%, 사유부분의 52.7%가 과거 공산당의 구성원이었다. 친 서방적 시장주의를 표방했던 엘친의 집권 이후 엘리트 교체과정에도 불구하고 중앙 정부의 지도층의 경우 4분의 3이 과거 노멘클라투라출신이었으며, 지방의 경우는 80%를 넘었다. 당시 엘친진영의 지도층을 이루는 핵심인사들 중 10%만이 탈 사회주의 체제전환과정에서 충원된 새로운 엘리트였다. O. Kryshstanovskaya & S. White, "From Soviet Nomenklatura to Russian Elite," *Europe-Asia Studies*, Vol. 48, No. 5 (1996), pp. 727~729.

야기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⁷²

러시아에서 사회주의 특권계급이었던 노멘클라투라의 성원들은 혁명적 변화가 수반되지 않은 탈 사회주의 체제전환과정에서 새로운 형태의 지배세력인 ‘유산자’로의 변신에 성공할 수 있었다. 이미 페레스트로이카의 시기 중 노멘클라투라들은 국영재산의 민영화과정 즉 국유기업→협동소유기업→사기업 형태의 민영화과정에 참여했다.⁷³ 이 과정에서 정치와 경제가 결합되었던 시기에 형성된 노멘클라투라들의 배타적 특권과 연줄망, 그리고 이들에 의한 ‘지대추구’(rent-seeking)⁷⁴는 이들의 유산자로의 전환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이와 같은 점에서 새로운 유산계급의 형성은 노멘클라투라→클렙토클라투라(kleptoklatura)로 도식화 될 수 있는 것이었다.

문제는 이와 같은 변화가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으며, 상당한 문제와 갈등을 수반한 것이었다는 점이다. 우선 노멘클라투라 출신들의 기업가들이 민주적인 체제에서는 기업가로 변신하기 어려웠다는 점이다. 자신들의 사업능력보다는 정치적인 능력으로 유산자로 전환한 이들의 등장은 정직하고 재능있는 사람들이 기업가로 변신하는 것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기업경영에서도 합리성

72 조한범, “러시아 사회구조 변화와 사기업가 형성의 경향성,” 현대산업사회연구 (서울: 한양대출판부, 1995) pp. 108~114.

73 O. И. Шкратан, и тд. “Старые и новые хозяева в России,” *Мир России*, Том. 1, No. 1 (Москва: 1992), p. 77.

74 제도가 시장의 질서가 지배적인 상태에서부터 직접적인 정치적 할당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모호한 상태로 접근할수록 지대추구는 중요한 사회적 현상으로 등장하게 된다. J. A. Buchanan, *et al.*, *Toward a Theory of the Rent-Seeking Society* (Texas A&M University Press, 1980), p. 4. 따라서 국가통제의 약화와 지배집단의 비제도적 간섭이 증가하는 이행기 사회주의 체제의 경우 지대추구형태가 증가하게 된다.

을 보여주지 않는다는 점이다.⁷⁵ 이와 같은 점은 새로운 부의 형성에 대한 정당성을 약화시키는 것이자, 신흥 유산자에 대한 사회적 적대감을 형성시키는 것이었다. ‘마피아 경제’⁷⁶라는 표현은 바로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한 냉소적 표현이다. 탈사회주의 체제 전환은 구사회의 해체를 수반하며, 이를 토대로 시장체제의 새로운 경제주체들을 만들어내는 과정이다. 그러나 노멘클라투라들의 신흥 유산자층으로의 전환은 사회주의 체제전환기의 중요한 특성인 전반적인 사회해체 현상 및 경제의 범죄화와 병행되어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다.

동시에 사회주의에서 비교적 안정적 생활을 유지했던 대다수의 구성원들을 하향이동시키는 과정을 수반한다는 점에서 갈등적 요소를 내재하고 있다. 특히 탈 사회주의 체제전환 초기 러시아 사회의 양극화는 급속하게 진행되었다. 예를 들어 탈 사회주의 체제전환 초기 2년 만에 러시아 주민의 상위 10%와 하위 10%간의 소득의 차이는 이미 4배 이상 증가했다.⁷⁷ 러시아의 탈 사회주의 체제전환과정은 10여 년에 이르는 ‘구체제의 해체’ 기간 중 구조화된 경기침체를 야기했으며, 따라서 전 사회적인 하향화 경향이 발생했다. 특히 한편으로 새로운 유산계급의 형성이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반면, 한편으로는 지속적 실질소득 감소를 경

⁷⁵ Roman Frydman, *et al.*, “Capitalism with a Comrad’s Face,” *Transition*, Vol. 2, No. 2 (1996), pp. 9~10.

⁷⁶ 러시아적 의미에서 마피아는 시장체제로의 이행기가 결과한 필연적인 산물이라는 점이다. 이와 같은 점에서 Handelman은 러시아 마피아 현상을 설명하기위해서 러시아식 발음인 ‘마피아’(Mafiya)를 사용함으로써 서방세계와 다른점을 도출하고 있다. S. Handelman, “The Russian ‘Mafia,’” *Foreign Affairs*, Vol. 73, No. 2 (1994), pp. 83~96.

⁷⁷ В. Головачев, “У нас есть богатые и бедные. Нет среднего класса,” *Экономика и жизнь*, No. 44 (Москва, 1992).

협하는 대다수의 대중들이 존재했다. 실질소득 감소는 사회해체 현상을 심화시키는 핵심적 요소였다. 그 영향은 러시아 남성의 평균 기대수명이 1987년 64세에서 1994년 57.3세로 줄어드는 상황이 상징하듯이 극단적 형태로 표출되었다.⁷⁸

계층의 하향이동화 경향은 연령과 성의 차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났다. 변화에 탄력적 대응이 가능한 청년세대와 그렇지 못한 노년세대간에는 상당한 차이가 나타난다. 1996년의 경우 젊은 세대(18~26세)의 6%만이 자신이 하류계층이라고 생각했으나, 노년층(66~75세)의 경우 이 비율은 36%에 달했다. 반대로 47%의 젊은 세대는 자신들을 중간층이라고 생각했으며, 노년층의 12%만이 자신들이 중간층에 속한다고 생각했다. 이와 같은 차이는 아직 시장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지 않았던 1991년에는 나타나지 않았던 것이었다.⁷⁹ 노년층의 경우 대부분 연금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주의 복지체제의 축소와 경제침체에 따른 국가재정 위기 등으로 직접적인 소득감소를 경험하게 되며, 젊은층에 비해 구체제에 익숙해있기 때문에 새로운 체제에 적응할 유연성이 훨씬 더 작다. 반면 젊은층은 구체제에서 중요한 지위를 점하

⁷⁸ 1990년대 중반까지 러시아에는 약 500~700만 명의 알콜중독자, 250~500만 명의 마약 중독자, 300만 명의 떠돌이, 250~400만 명의 난민 및 강요된 이주자들, 그리고 범죄층이 약 150~200만 명으로 추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르면 전체적으로 1,500~2,000만 명(러시아인의 약 1/7)이 일탈적 행위자에 해당하게 된다. 또한 인구감소는 출산율의 저하 및 사망률의 증가에 기인하는데 후자의 요인이 1/3 정도 더 큰 것으로 지적되었다. 물론 러시아인의 사망률 증가의 상당부분은 비자연적 사망의 급증에 따른 것이며, 이 역시 체제전환의 충격에 따른 것이다. A. V. 오스트롭스키,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른 의식구조의 변화,” 시장경제의 도입과 극동지역의 사회경제적 변화 (한양대 중소연구소-러시아 과학원 극동연구소 제7차 한러 학술회의, 1996).

⁷⁹ David S. Mason, Antal Orkeny, Svetlana Sidorenko-Stephenson, “Increasingly Fond Memories of a Grim Past,” *Transition*, Vol. 3, No. 5 (1997), p. 19.

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제의 해체과정에서도 지위의 상실을 통한 특별한 타격을 받지 않으며, 새로운 교육과 훈련의 기회를 통해 보다 유연하게 시장체제에 적응할 기회를 가지고 있다.⁸⁰ 무엇보다 젊은층의 교육과 경력의 대부분이 페레스트로이카 이후에 축적된 것이라는 점에서 구체제에서 형성된 경력을 가지고 있는 노년층과 차이를 보이게 된다.

탈 사회주의 체제전환의 충격은 여성층에게 더 강하게 작용했다. 사회주의 완전고용체제가 와해되면서 발생한 대량실업은 우선 비숙련 노동자와 여성 그리고 나이가 많은 노동자와 같은 비경쟁적인 부분들에서 발생했다. 따라서 비숙련 노동분야의 종사율이 높던 여성들에 있어서 실업의 비율이 급속하게 증가하며,⁸¹ 이는 여성 및 여성이 가장인 세대의 사회경제적 지위하락으로 이어졌다.

러시아 사회의 전반적인 하층분해 및 양극화 현상과 더불어 양극단 사이에 새로운 중간집단이 형성되고 있는 징후들도 나타났다. 체제전환 초기의 경우 특권에 기반한 부의 축적이 보다 용이했던데 비해서 현재의 상황은 보다 실질적인 ‘능력’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상황적 변화에 기인한다.⁸² 그러나 형성과정 중의

⁸⁰ 개혁 이후 새롭게 성장한 사적부문에서 일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있느냐는 연령층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1994년 말 조사의 경우 청년층의 64% 중년층의 49%가 사적부문에서 일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한 반면, 노년층의 경우 이 비율은 27%에 그쳤다. *Moscow News*, No. 12 (March 31~April 6, 1995), p. 7.

⁸¹ 구 소련체제에서 많은 여성들은 저숙련상태에서 힘든 육체노동에 종사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소련의 건축산업의 25%가 여성들의 육체노동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었다. N. Rimashevskaja, “Perestroika and Status of Women in the Soviet Union,” Shirin Rai, et al., *Women in the Face of Change* (Routledge, 1992), p. 13 이와 같은 구조적인 요인들은 시장경제체제로의 이행기에 여성들이 실업의 위험에 보다 쉽게 노출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⁸² Harley Balzer, “Russia’s Middle Classes,” *Post-Soviet Affairs*, Vol. 14, No. 2

러시아 중간계급은 장기간의 형성과정을 거친 자본주의와는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다.

전체적으로 러시아의 탈 사회주의 체제전환과정은 원시적 평등주의에 기초한 사회주의적 공동체의 분화과정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 과정의 초기에 전 사회적 하향화를 수반한 양극화의 특성이 나타났다. 신흥 유산자와 하향화된 대중이라는 이중구조는 러시아 사회갈등의 기본구조라고 할 수 있으며, 새로운 중간계급의 형성의 징후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지형의 근본적 변화는 아직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회적 하향화는 러시아 사회의 양극화 구조를 형성, 사회적 불안정의 근본적 지형을 형성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문제들의 발생은 시장체제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생성되는 기본적인 토양으로 작용했다. 불평등 구조 형성의 정당성 결여와 사회주의 복지체제에 대한 회귀 여론의 확산은 선거를 통해 정치적 태도로 표출되었다.

(1998), p. 166.

V

정치지형의 재편: 시장주의와 반시장주의의 갈등구조

탈 사회주의 체제전환과정은 러시아 사회의 양극화를 초래하고, 이는 정치분야에서의 가시적 갈등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점에서 탈 사회주의 과정에서 발생한 사회적 갈등은 1990년대와 그 이후의 러시아 정치변화의 핵심적 변수였다고 할 수 있다. 기존 구조의 충격적 해체를 수반한 러시아의 탈 사회주의전환은 급격한 가격 자유화와 초인플레이션, 경제구조의 재편과정에서 발생하는 경기침체와 사회복지체제의 축소 및 국영기업에 대한 보조 중지 등은 러시아 국민들의 실질생활을 급속히 악화시켰으며, 사회의 해체와 주변부화를 촉진시켰다. 이와 같은 개혁초기의 부정적인 측면들은 1993년과 1995년의 총선, 1996년의 대선 및 이후의 푸틴 대통령체제의 등장과정에 반영되어 나타났다. 그 결과는 친서방·시장주의에 대한 지지도의 감소와 급진적 시장화에 비판적인 보수세력의 상대적 강화로 귀결되었다. 이와 같은 점에서 푸틴체제하에서 진행되고 있는 러시아의 안정은 잠정적 타협책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급진적 시장화의 결과로 사회의 급속한 양극화가 초래되었던 1993년 10월의 선거는 최초의 정치적 평가로서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당시 결과는 노동자층과 신흥 유산자층간의 대립적인 정치성향을 명백히 보여주었다.⁸³ 전체적인 선거결과는 대다수 러시아인들이 급진적인 시장화에 비판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개혁과정의 수혜자들인 기업가들의 경우는 개혁노선의 정당에 대

⁸³ 러시아의 개혁세력과 서방에 의외로 받아들여졌던 1993년의 총선에서 친 개혁그룹인 「러시아의 선택」(15.51%), 「야블로코」(7.86%) 등은 약세를 보인 반면, 개혁비판세력으로 분류되는 보수그룹인 지리노프스키의 「러시아자유민주당」(22.92%), 「러시아 공산당」(12.40%) 그리고 「농업당」(7.99%) 등이 두각을 나타냈다. *Российская газета*, 28 Декабря 1993.

해서 압도적인 지지도를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⁸⁴ 개혁과정에서 하층으로의 이동을 강요당했던 다수층이 개혁에 비판적인 정당을 선호한 반면 개혁의 수혜자들은 현재와 같은 개혁을 지속할 정치세력을 지지했던 것이다. 이는 초기 열친에 대한 높은 지지도와는 상반된 것이었다.

시장경제로의 이행은 러시아 사회의 급격한 구조적 변동을 초래했고, 정치적으로 자유-민주주의, 인민주의(populist), 우익 민족주의의 지형을 탄생시킨다. 대다수의 구성원들인 국가의존형 구체제의 관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국가-인민주의(state-populism) 형태를 띠게 된다. 이와 같은 인민주의는 소련체제에서와 마찬가지로 생산수단에 대한 국가의 소유를 지지하며, 사회정의와 직업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가부장적 국가를 선호한다. 인민주의는 경제에 대한 비효율적인 관리보다는 지식인과 부패한 관료에 대한 저항감으로 표출된다. 따라서 사회정의에 대한 이해는 위계적인 권력과 특권, 그리고 국가주도형 사회분화체제의 정당화와 다르지 않게 된다. 이들은 자신들의 고용과 사회적인 혜택의 축소를 가져오는 가격의 자유화와 사유화에 반대하게 된다. 따라서 공식적인 노동조합들은 인민주의적 정서에 부응하여 시장경제로의 이행에 상당한 저항을 하게 된다. 인민주의는 공산당의 약화와 소련의 중앙권력의 해체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다. 그러나 상당한 부작용을 수반한 개혁의 실행과정에서 좌파와 우익 민족주의의 반민주·반개혁 연대가 강화되어 나타났다.⁸⁵ 시장경제체제로의 개혁

⁸⁴ *Деловая жизнь*, No. 13 (1993).

⁸⁵ Victor Zaslavsky, "Contemporary Russian Society and its Soviet Legacy," Bruno Grancelli ed., *Social Change and Modernization* (Berlin, New York: Walter de Gruyter, 1995), pp. 58~59.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도기적인 특성은 인민주의적 정서를 증가시킨다는 것이다. 푸틴체제의 등장이 가능했던 것은 시장체제로의 진행에 있어 근본적 변화를 수반하지 않으면서도 이와 같은 러시아의 특성을 반영한 현실적 선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체제전환과정의 부작용과 러시아 사회의 양극화라는 갈등구조에 기인했던 1993년의 선거의 추이는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나타났다. 1995년의 국가두마 의원선거는 이와 같은 경향성이 강화되었음을 보여주었다. 1995년 선거에서도 정부의 시장화조치들에 비판적인 반엘친세력이 승리했다.⁸⁶

1996년 대선에서 엘친의 승리는 러시아의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의 지속성을 확인했으나, 이는 절대적 지지에 기초한 것은 아니었다.⁸⁷ 엘친의 재선에도 불구하고 공산당과 유가노프는 지속적 지지의 확보에 성공했다는 점에서 보수·민족주의세력의 부각으로 특징지어지는 러시아 정치상황은 악화되지 않았다. 엘친체제하에서 지속적인 경제난과 측근의 부패와 사회범죄 증가, 과중한 대외부채 등의 문제들은 해결되지 못했다. 따라서 엘친은

86 당시 비례의석을 배정받을 수 있는 하한선인 5%이상의 득표를 얻은 정당은 「공산당」(22.30%), 「러시아 자유민주당」(11.18%), 「우리집 러시아」(10.13%), 「야블로코」(6.89%) 등 4개 정당이었다. 특히 극우 성격의 「러시아 자유민주당」과 「러시아 공산당」이 서로 자리바꿈을 했으며, 그 이유의 상당부분은 「러시아 자유민주당」이 합리적인 정책개발에 실패했고 과격한 선동에 의존한 반면 러시아 공산당은 지속적으로 시장화의 부정적 측면과 ‘사회주의 복지’를 상기시켰기 때문이었다. 비례의석의 배분을 통해서 157석(34.9%)을 획득한 「러시아공산당」은 결과적으로 하원의 최대 다수당으로 등장했다. *Российская газета*, 6 Января 1996.

87 러시아 대선의 1차투표에서 엘친과 유가노프는 각각 35.2%와 32.3%를 획득함으로써 치열한 경쟁을 보였다.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으므로 해서 치러진 결선투표과정에서 레베드를 합류시킨 엘친은 53.82%를 획득하여 대통령에 재선되었고, 유가노프는 40.31%를 획득했다. *Российская газета*, 10 Июля 1996.

경제 실정의 책임을 내각으로 돌려 재집권부터 퇴임시까지 5명의 총리를 교체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옐친의 정치적 후계자라고 할 수 있는 현 푸틴 대통령이 총리로 전격 발탁(1999. 8)되었으며, 차기 대통령 지명자로 선포되었다.

그러나 같은 해 실시된 3대 총선에서도 공산당은 113석을 확보, 의석비율 25.7%를 점유하여 원내 다수당의 지위를 유지했으며, 체첸전쟁의 승리 등 푸틴 총리의 인기에 힘입어 급조된 친여 정당인 단합당은 72석을 확보함으로써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⁸⁸ 공산당은 제2대 총선과 비교하여 44석이 감소하였다. 그러나 공산당을 제외한 사회민주주의 계열 정당·정파들의 득표율이 저조하게 나타난 것은 공산당을 대체할 만한 중도좌파 정당의 부재 때문이었다. 이와 같은 대안의 부재는 푸틴체제 등장의 기초로 작용했다.

푸틴은 시장화와 사회주의적 정서의 반 시장화라는 이분법적 갈등구조 속에서 자신이 선택해야 할 정치적 노선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다. 푸틴의 대중적 인기는 러시아인의 자긍심을 손상시켰던 체첸전쟁의 성공적 수행과 아울러 상대적으로 깨끗한 이미지에 힘입은 바 컸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푸틴이 체제전환기 러시아인의 정서와 상실감을 정확하게 읽고 있었다는 점이다. 푸틴이 ‘강한 러시아 건설’을 자신의 중심적 이미지로 상징화한 것은 바로 체제전환에 따른 러시아인의 ‘정신적 공허함’을 채울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호소력을 가진 것이었다.

⁸⁸ 친정부성격의 「단합당」은 72석(16.4%)을 점유했으며, 중도파인 「조국-러시아당」은 67석(15.2%)을 점유했다. 전체적으로 제3대 총선 결과 국가두마 의석은 친정부·개혁파가 28%, 중도파가 15%, 공산·민족주의파가 30%, 기타 소수정당과 무소속이 28%를 각각 차지했다. <<http://www.rferl.org/elections/russia99/results/index.html>>.

푸틴 총리의 총선 선전에 따라 옐친 대통령은 전격 사임을 발표(1999. 12. 31)하고 푸틴 총리를 대통령 권한대행에 임명함으로써 조기 대선(2000. 3. 26)이 확정되었다. 이는 옐친이 자신의 퇴임 이후에 대한 안전판을 구축하려는 의도를 가진 것이었다. 푸틴 대통령 권한대행 겸 총리는 총선에서의 국민적 지지를 기반으로 정국을 주도하면서 대권 장악을 모색하였으며, 자신의 강한 러시아론을 구체화하는 노력을 기울였다. 푸틴은 공개적으로 경제난과 부익부 빈익빈의 사회적 양극화 현상, 과학기술력의 저하, 사회범죄 증가, 연방으로부터 지역정부들의 이탈 경향 등을 러시아 주요 문제로 지적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들을 제시했다. 대안의 골자는 상당부분 국가의 적극적 역할의 수행에 맞추어졌다. 또한 대외적으로 러시아의 지위 강화추구를 약속했다. 이는 시장화와 반시장화의 갈등구조를 봉합하는 점에서 상당한 효과를 발휘했다. 따라서 선거전부터 푸틴의 당선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졌으며, 결과가 사실로 나타났다. 러시아 제2대 대선(2000. 3. 26)에서 푸틴은 52.49%를, 공산당 당수인 쥘가노프는 29.14%를, 그리고 온건 시장주의 성향의 야블린스키는 5.79%를 얻었다.⁸⁹

푸틴의 당선은 강력한 지도자 이미지의 부각, 기존 보혁구도의 타파, 경제의 상대적 안정 등 다양한 변수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였다. 그러나 엄밀하게 탈 사회주의 체제전환과 관련하여 푸틴의 노선은 분명하지 않다. 테러와 내전 등에서 강력한 지도자의 이미지를 구축한 푸틴은 개혁진영에게는 ‘시장개혁의 지속,’ 보수진영에게는 ‘강한 러시아’를 약속함으로써 개혁 대 보수라는 기존의 이념적 구도를 벗어나고자 시도했다. 푸틴체제의 등장과

⁸⁹ <<http://www.rferl.org/elections/russia00report/>>.

러시아의 상대적 안정의 가장 중요한 요인은 체제전환의 혼란된 상황과 갈등구조에 지친 러시아인들이 젊고 강력한 지도자를 통해 이를 해소할 수 있다는 기대를 가졌다는 점일 것이다. 그러나 푸틴의 대통령 당선은 구체적 비전과 정책보다는 옐친 및 집권세력의 집중적 지원과 체첸 군사작전 등의 단기적 인기로 크게 의존했다는 점에서 러시아 정치구도의 근본적 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집권에는 실패했으나 공산당에 대한 지속적인 지지세라 할 것이다. 공산당 당수로 대선후보였던 주가노프는 러시아 중앙지역과 지방의 경제 낙후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율을 기록, 29.14%를 획득하여 3대 총선의 공산당 지지율을 지속시켰다. 반면 개혁론자인 야블린스키는 5.79%를 획득하는데 그쳐 급진적 개혁에 대한 러시아인들의 실망을 확인 시켰다.

체제전환 시작 이후 러시아의 선거과정에 나타난 특성인 좌익 세력과 민족주의세력의 부각의 원인은 대내적으로는 진행된 급진적 개혁의 결과가 정치, 경제, 사회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문제점을 야기했으며, 새로운 부의 형성과정에서 기회를 상실한 주민들의 선택의 결과였다. 따라서 푸틴체제의 등장은 시장화를 둘러싼 갈등구조의 해소라기 보다는 이와 같은 문제들에 지친 러시아인들의 잠정적 합의라는 성격을 지닌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탈 사회주의 체제전환과정의 러시아 정치지형의 형성은 시장화과정에서 발생하는 계급·계층구조의 변화와 이들에 의한 정치적 태도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 특히 시장화과정에서 구체제로부터 일상적으로 받아왔던 혜택을 축소당한 채 하층으로의 이동을 강요받았던 계급·계층들은 시장화에 비판적이었으며, 사회주

의적 복지체제의 복원을 원했다. 이들은 급진적 시장화에 반대하는 좌파 정치세력의 확고한 지지기반이었다.

VI

북한사회 변화에 대한 시사점

중국과 러시아의 체제전환과정이 주는 일반적 함의는 사회주의의 발전정도라는 구조적 변수와 초기적 조건(initial conditions)에 따라 체제전환과정이 영향받는다라는 점이다. 그리고 탈 사회주의 체제전환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변화는 체제전환의 양상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따라서 구소련과 다른 사회구조를 가지고 있는 북한에 러시아의 경험이 직접적인 함의를 지니지는 않는다. 러시아와 북한이 서로 다른 정치, 경제, 사회적인 조건들에 처해 있기 때문이며, 따라서 체제개혁의 과정과 경로도 다르게 나타나고, 사회적 변화의 양상도 다를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역시 사회주의 체제의 일반성을 상당부분 공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러시아의 체제전환기에 나타나는 경험은 중요한 의미를 지닐 것이다. 또한 결과적으로 북한의 체제전환의 주요 내용 역시 시장화와 민주화일 것이기 때문에 러시아의 시장화와 민주화과정, 그리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회적 변화의 문제들에 대한 검토는 북한체제전환의 예측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시사점들을 줄 것이다.

러시아의 체제전환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장 중요한 시사점은 이해관계의 근본적 변화를 수반하는 전환과정에서 다양한 사회갈등이 부각된다는 점이다. 특히 러시아의 경우처럼 ‘해체를 수반하는 체제전환’ 사회갈등의 여지가 크다는 것이다. 사회주의 발전정도가 높고 사회주의 체제간의 상호의존성이 클수록 이를 해체하는 비용이 더 크게 발생하기 때문이다.

러시아는 사회주의 체제에서도 발전된 국가에 해당했다. 따라서 사회주의 체제의 완결성의 정도, 경제의 중앙집중화의 정도, 사회주의 복지체제의 정비 정도가 여타 사회주의 국가에 비해서

높았다. 그리고 소유권제도의 국유화 수준도 매우 높았다.⁹⁰ 그러나 이와 같은 사회주의 체제의 결과물들은 시장경제체제와 조화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사회주의 체제의 붕괴의 원인을 제공한 비효율적인 것들이 대부분이었다. 이와 같은 요소들은 체제전환과정에서 해체되어야 했으며, 이에 수반하여 상당한 정치, 경제, 사회적 해체비용이 발생했다. 이는 결국 사회주의 체제가 발달되어 있을수록 체제전환과정에서 해체비용이 그 만큼 더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러시아의 경우 사회주의 복지체제의 축소는 연금생활자와 노동자들의 저항을 불러왔으며, 이는 좌파그룹의 정치적 부상의 힘으로 작용했다. 러시아는 중앙집중화된 경제체제의 해체과정에서도 구조적인 경기후퇴라는 심각한 후유증을 경험했다. 또한 대부분 국유화되어있던 소유권의 사유화도 상당한 문제점들을 수반하며, 단기간에 완료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사회주의 중진국 수준의 공업화를 달성한 것으로 보이는 북한의 경우도 상당한 ‘해체비용’의 지불이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다양한 형태의 사회갈등 요소의 부상을 예상해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점에서 북한의 중앙집중화된 경제체제는 해체과정에서 상당한 후유증을 경험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현재 북한은 중앙의 배급체제가 작동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지방의 자생적인 경제적 자구노력과 개인들간의 거래가 활성화되는 경향을 띠고 있

⁹⁰ 사회주의 체제의 발달, 경제의 중앙집중화, 소유권의 형태, 사회주의 복지체제 등의 발달정도와 경제체제변환의 관계에 대해서는 Laszlo Csaba, “The Political Economy of the Reform Strategy: China and Eastern Europe Compared,” *Communist Economies & Economic Transformation*, Vol. 8, No. 1 (1996). pp. 56~57 참조.

다. 이와 같은 추세가 지속될 경우 체제전환기의 해체비용은 사회주의 체제의 와해기에 이미 나타나게 될 것이다.

사회적 갈등구조의 형성과 변화과정은 동질화되어 있던 계급·계층구조의 변화와 신흥 유산계급의 형성과정과 밀접한 관련을 맺게 될 것이다. 특히 구체제의 엘리트들이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심각한 문제는 이들이 체제개혁의 효율성보다는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우선시 한다는 점이다. 러시아에서 구 노멘클라투라들은 국유재산을 자신들의 사회적인 영향력을 기반으로 불법적으로 이용하거나 점유한 클렙토클라투라(kleptoklatura)로 변화했다. 특권층이 잘 발달해 있는 북한의 경우에도 러시아와 유사한 형태의 사회적 하향화와 특권층의 유산자화 가능성이 높으며, 이 경우 갈등적 사회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게 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구조화된 경제위기 속에서 대다수 북한 주민들이 이미 사회적 하향화를 경험했다는 점에서 러시아와는 다소 다른 양상을 보일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결과에 따라 정치적 구조 재편이 영향받는다라는 점은 러시아 사례가 확인시켜주고 있다.

경기후퇴형 체제전환의 경우 사회적, 정치적 비용은 개혁입안자들의 책임으로 나타나며, 따라서 중도좌파가 중심적인 정치세력으로 부각되는 경향을 보였다. 이들은 사회민주주의적 이념을 내세우며, 사회주의의 복지적 특성에 미련을 가지고 있는 대중들에게 호소력을 가지게 된다. 1990년 이후 급진적인 시장화정책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좌파와 민족주의 세력이 부각된 점은 이를 설명해준다. 따라서 북한에서도 좌파지향성의 사회적 정서는 상당기간 존속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통일한국 사회의 정치구조 형성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점을 토대로 했을 때 러시아의 경험은 변화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북한사회를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비교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혁명적인 변화를 수반하지 않는 체제 전환이 북한에서 진행될 경우 엘리트간의 연속성이 강하게 나타날 것이라는 점을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러시아의 사례에서처럼 북한의 지배 엘리트들은 본격적인 체제전환과정이 시작된다 고 하더라도 지대추구행위와 부패, 불법적 경제행위 등을 통해 자신들의 특권을 새로운 체제에 맞게 재빠르게 변화시킬 것이다. 북한의 개혁과정에서도 중앙집권적인 명령경제체제의 해체와 국가의 경제에 대한 간섭을 대폭 축소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경제의 탈중앙화는 국가의 통제능력 상실을 야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사회주의 기득권층을 중심으로 하는 이익집단들에게 경제권력이 양도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사회주의 경제구조의 탈 중앙화과정은 과도기적인 혼란상태를 수반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지하경제화 현상이 현저하게 나타날 것이다. 경제체제의 혼란상태와 지하경제의 확산은 통제력을 가진 관료엘리트들의 비제도적 간섭을 증가시키게 될 것이다.

북한의 체제전환과정도 전반적인 구조조정과 경기후퇴과정을 수반하게 될 경우 시장화에 대한 전반적 반감과 아울러 회귀지향성을 가진 보수파들의 반발과 저항을 유발할 것이다. 그러나 일단 체제전환과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대부분 엘리트층들이 이를 대세로 받아들일 경우 구체제의 기득권층들과 엘리트층들은 저항보다는 지대추구행위와 불법적 행위를 통한 '내부자 사유화'과정을 급속히 진행시키게 될 것이다. 사회주의 경제구조의 탈 중앙화과정은 과도기적인 혼란상태를 수반할 것이며, 이 과정에

서 일시적으로 경제의 지하화와 아울러 구엘리트층의 지배력을 강화시키게 될 것이다. 지하경제화 현상은 북한의 사회주의 경제 구조가 와해되는 기간에 따라서 양태를 달리할 것이다. 북한의 공식배급체제가 현재와 같은 형태로 기능하지 않는 상태에서 지하경제화는 암시장의 발달과 이에 대한 관료부패의 결탁, 그리고 전체적인 생존경제적 특성의 부각으로 나타날 것이다. 또한 시장 체제의 형성에 따라서 사회적 자원의 흐름이 변화하고, 따라서 사회구조의 재편이 발생한다. 이는 새로운 경제주체의 형성과 아울러 소외층들을 형성시킬 것이고 이들의 반발은 공산주의체제의 복구와 국가주도 경제체제 및 사회주의 복지체제에 대한 회귀라는 이념적 지향을 보일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체제전환과정에서 양태에 따라서 정도의 차이를 보일 수는 있으나 좌파세력이 주요한 정치세력을 형성할 것이다. 체제전환과정에서 경제적 성장이 동반되지 않고 사회적 공핍화 현상이 악화된다면 좌파의 부각은 보다 심화될 것이다.

러시아의 탈 사회주의 체제전환의 함의들은 발달된 사회주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러시아의 특수성을 반영했기 때문에 조건이 다른 북한에 직접적으로 적용될 수는 없을 것이다. 북한이 처한 사회주의적 발전단계와 특수한 상황적 조건은 향후 북한의 체제전환과정의 방향성을 좌우할 구조적 요인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북한체제전환의 과정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남한의 존재는 북한의 변화가 러시아 사례와 본질적으로 다를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비교사회주의적 관점에서 북한이 지닌 사회주의적 특성과 북한이 처한 상황적 특수성은 북한변화의 방향성과 아울러 사회갈등의 양상을 결정할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VII

결론

러시아의 탈 사회주의 체제전환과정의 경험은 시장화와 불평등 구조로의 전환과정에서 갈등적 요소들이 부각되고, 정치지형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갈등적 요소의 부각과 정치적 영향은 결국 시장화과정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에서 체제전환의 방향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러시아의 체제전환은 시장화를 핵심적 내용으로 하고 있고, 이는 동질화되어 있던 사회주의 계급·계층구조의 해체 및 불평등 구조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따라서 사회주의 복지체제의 균등한 혜택에 안주하던 구성원들은 차별화된 시장체제로 적응을 해야했다. 동시에 충격요법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구조조정과 장기적 경제침체, 사회주의 복지체제의 축소, 노동시장의 재편과정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 러시아는 대중적인 하향이동이라는 특징적 계급·계층구조의 변화양상을 나타냈다. 대중적 하향화와 반대로 구체제의 기득권층인 노멘클라투라들은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상층부를 형성했다. 이는 새로운 부유층 형성과정의 정당성 결핍을 의미했으며, 특히 체제전환초기 시장화 전반에 대한 비판적 시각의 형성으로 귀결되었다. 그리고 대중적 하향화를 수반한 사회의 양극화는 전환기 러시아 정치구도에 반영되어 나타났다.

시장경제로의 체제전환은 구체제의 해체와 신 질서의 형성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시장체제의 형성에 대한 차별적인 반응을 야기했다. 중요한 것은 사회주의 체제의 해체과정에서 국가의존적 특성에서 수혜를 입던 층들의 손실이 가장 컸으며, 따라서 시장화에 대한 이들의 입장은 비판적이었다.

탈 사회주의 체제전환의 과정은 복합적인 과정이며, 정치·경제·사회 각 영역에서 다양한 변화를 수반한다. 구 사회주의권

국가들이 체제전환 초기에 지니고 있던 초기적 조건들(initial conditions)은 체제전환의 방식에 영향을 미치고, 전환전략에 따라서 사회변화의 양태도 일정정도 다르게 나타난다. 러시아의 경우 급진적인 사회의 해체에서 오는 다양한 변화가 특징적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급진적인 개혁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구 사회주의 시기에 형성된 구조적 요인들에 의한 영향과 개혁과정에서 발생한 갈등구조는 체제전환의 방향에 영향을 미침으로서 급진적 체제전환 시도의 결과는 의도했던 것과는 다르게 나타났다.

러시아 사회의 경우 개혁으로 인한 급진적인 사회변화과정에서 구체제의 요소들이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이는 탈 사회주의 체제전환은 순수한 경제적인 효율성뿐만 아니라 구체제의 효과적인 해체와 대안체제의 형성이라는 보다 복합적 과정을 통해 완성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새로운 시장환경을 형성하는 제도적인 장치의 마련과 이에 적응할 수 있는 자율적 경제주체로서의 노동자와 기업가의 형성은 시장화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된다. 무엇보다도 구 사회주의 체제의 동질화된 계급·계층구조의 변화과정이 모두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공정한 '게임의 법칙' 속에서 진행됨으로써, 새롭게 형성되는 '부'의 정당성이 확보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정당성을 결여한 계급·계층구조의 변화과정은 사회적 갈등구조를 형성하고, 이는 정치지형 형성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결국 시장화를 위한 정책적 추진력을 약화시키게 되기 때문이다.

러시아의 경험은 구체제에서 기원하고 있는 부정적 요소들의 영향, 특히 구 지배세력들의 지대추구행위를 막고, 경쟁적인 노동시장의 형성과 사회주의 복지체제의 축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사

회적인 저항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제어하느냐에 따라서 체제 전환의 효율성이 좌우될 것이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점들은 특히 북한의 탈 사회주의 체제전환과 사회변화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갈등에 대한 적절한 조절력이 확보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참 고 문 헌

1. 단행본

- 서재진 외. 사회주의 개혁개방 사례 비교연구. 서울: 통일연구원, 1992.
- 폴 그레고리·로버트 스투어트. 한종만 외 역. 러시아 소련 독립국가연합 경제의 구조와 전망. 서울: 열린책들, 1992.
- J. H. 터너. 김진균 외 역. 사회학 이론의 구조. 서울: 한길사, 1983.
- Aslund, A. *Gorbachev's Struggle for Economic Reform*. Ithaca, 1991.
- _____. *Post-Communist Economic Revolutions: How Big a Bang?* Washington, D.C.: The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1992.
- Buchanan, A. *et al. Toward a Theory of the Rent-Seeking Society*. Texas A&M University Press, 1980.
- Dyker, David A. *Restructuring the Soviet Economy*. Routledge, 1991.
- Hausner, J., B. Jessop and K. Nielson eds. *Strategic Choice and Path-Dependency in Post-Socialism*. Edward Elgar, 1995.
- Jeffris, Ian. *Socialist Economies and the Transition to the Market*. London: Routledge, 1993.
- Kornai, J. *The Road to a Free Economy*. New York: W.W. Norton, 1990.
- Lane, David. *Soviet Society under Perestroika*. Boston: Unwin Hyman, 1990.
- Mccauley, Martin eds. *Gorbachev and Perestroika*. New York: St. Martin's Press. 1989.
- Staniszki, Jadwiga. *The Dynamics of Breakthrough in Eastern Europe: The Polish Experience*. Berkeley and Los Angele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1.
- Szalai, Erzsebet. *Gazdsag es hatalom(Economy and power)*. Budapest: Aula, 1990.
- Szelenyi, Ivan. *Socialist Entrepreneurs: Embourgeoisement in Rural*

- Hungary*. Madison: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1988.
- Yablinsky, G. & Fedorov, B. *500 Days Program*. 한중만 역. 소련의
시장경제로의 이행. 서울: 열린책들, 1991.
- Yegor, Gaidar & Karl Otto Pohl. *Russian Reform/International Money*.
Cambridge: The MIT Press, 1995.
- Грасильщиков, В.А. и др., *Модернизация: Зарубежный опыт и
Россия*. Москва: Агентство Информат, 1994.
- Деловая жизнь*. No 13, 1993.
- Н.В. Воротилов. *Экономическая самостоятельность предприя-
й в рыночном хозяйстве* (СПб, 1993).
- С. Н. Максимов. *Перестройка и проблемы хозяйственных реформ*
(СПб: Издательство СПбГУ, 1992).
- Э.Ф. Борисов. *Проблемы развития экономики нашей страны*
(1993).

2. 논문

- “1991~1993년도 러시아 경제개혁의 기본방향과 결과.” 러시아연구. No.
2. 서울: 대륙연구소, 1994.
-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경제부. “러시아의 사회-경제개혁: 현상향과 새로운
접근법.” 중소기업. 1994 여름호.
- 이창제. “러시아 경제체제전환 시도에 대한 평가.” 러시아 새질서의 모색.
서울: 열린책들, 1994.
- 이철원. “러시아의 최근 경제현황.” 지역경제. 1995. 5.
- 전성우. “동서독 통일과정의 사회학적 함의.” 김명수, 이연택 외. 북한사회
의 이해. 서울: 한양대학교 출판원, 1997.
- 조한범. “러시아 사회구조변화와 사기업가형성의 경향성.” 현대산업사회
연구. 서울: 한양대출판부, 1995.
- _____. “북한사회연구의 쟁점과 과제.” 북한연구학회발표문. 2004.
- Juvakin, Dmitriy. “Financial crisis in Russia in 1998.” unpublished
paper. 박제훈. 『러시아 체제전환과 자본주의 발전에 관한 연

- 구』 .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0.
- Aslund, A. “Reform vs. ‘Rent-Seeking’ in Russia’s Economic Transformation.” *Transition*, Vol. 2, No. 2, January 1996.
- Balzer, Harley. “Russia’s Middle Classes.” *Post-Soviet Affairs*. Vol. 14, No. 2, 1998.
- Bornstein, M. “Russia’s Mass Privatisation Programme.” *Communist Economies & Economic Transformation*. Vol. 6, No. 4, 1994.
- Calvo, G. & J. Frenkel. “Credit Markets, Credibility, and Economic Transformation.”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Vol. 5, No. 4, 1991.
- Cochrane, J. H. and B. A. Ickes. “Macroeconomics in Russia, E. D. Lazear.” *Economic Transition in Eastern Europe and Russia*. Hoover Institute Press, 1995.
- Colton, T. *et al.* “Five Years after the Collapse of the USSR.” *Post-Soviet Affairs*. No. 13, 1997.
- Csaba, Laszlo. “The Political Economy of the Reform Strategy: China and Eastern Europe Compared.” *Communist Economies & Economic Transformation*. Vol. 8, No. 1, 1996.
- Dallin, Alexander. “Causes of the Collapse of the USSR.” *Post-Soviet Affairs*, Vol. 8, No. 4, 1992.
- Fischer, S. & A. Gelb. “The Process of Socialist Economic Transformation.”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Vol. 5, No. 4, 1991.
- Frydman, Roman, *et al.* “Capitalism with a comrad’s face.” *Transition*. Vol. 2, No. 2, 1996.
- Gans-Morse, Jordan. “Searching for Transitologists: Contemporary Theories of Post-Communists Transitions and Myth of a Dominant Paradigm.” *Post-Soviet Affairs*. Vol. 20, Number 4, 2004.
- Glinkina, Svetlana. “The Shadow Economy in Contemporary Russia.” *Russian Politics and Law*. Vol. 34, No. 2, 1996.
- Handelman, S. “The Russian ‘Mafia’.” *Foreign Affairs*. Vol. 73. No. 2.

- Hanson, P. "What Sort of Capitalism in Russia." *Communist Economies & Economic Transformation*. Vol. 9, No. 1, 1997.
- Kaneda, Tatsuo. "Gorvachev's Economic Reform." Peter Juviler, Hiroshi Kimura eds. *Gorvachev's Reform*. Aldine De Gruyter, 1988.
- Kollantai, Vladimir. "Social Aspects of Economic Reform in Russia." *Eastern Europe in Crisis and Way Out*. London: Macmillian, 1995.
- Kryshtanovskaya, O. & S. White. "From Soviet Nomenklatura to Russian Elite." *Europe-Asia Studies*. Vol. 48, No. 5, 1996.
- Lipton, D. & J. Sachs. "Creating a Market in Eastern Europe: the Case of Poland." *Brookings Papers on Economic Activity*. No. 2, 1990.
- Mason, David S. "Antal Orkeny, Svetlana Sidorenko-Stephenson, Increasingly Fond Memories of a Grim Past." *Transition*, Vol. 3, No. 5, 1997.
- Mckinnon, R. "Taxation, Money, and Credit in a Liberalizing Socialist Economy." *Economics of Planning*. Vol. 25, No. 1, 1992.
- Murrel, Peter. "Evolutionary and Radical Approaches to Economic Reform." *Economics of Planning*. Vol. 25. No. 1, 1992.
- _____. "What is Shock Therapy." *Post-Soviet Affairs*. Vol. 9, No. 2, 1993.
- Nee, Victor. "A Theory of Market Transition: From Redistribution to Markets in State Socialism." *ASR*. 54, 1989.
- _____. "Social Inequalities in Reforming State Socialism: between Redistribution and Market." *ASR*. 56, 1991.
- О. И. Шкратан. и тд, "Старые и новые хозяева в России." *Мир России* Том. 1, No. 1 (Москва: 1992).
- Pei, Minxin. "Microfoundations of State-Socialism and Patterns of Economic Transformation." *Communist and Post-Communist Studies*. Vol. 29, No. 2, 1996.
- Rimashevskaiia, N. "Perestroika and Status of Women in the Soviet

- Union.” Shirin Rai, *et al. Women in the Face of Change*. Routledge, 1992.
- Rona-Tas, Akos. “The First Shall Be Last? Entrepreneurship and Communist Cadres in the Transition from Socialism.” *AJS*. Vol. 100, No. 1, 1994.
- Rutland, Peter. “Another Lost Year for the Economy.” *Transition*. No. 7, February, 1997.
- Sachs, J. & D. Lipton. “Poland’s Economic Reform.” *Foreign Affairs*. Vol. 69, No. 3, 1990.
- Sachs, J. & Wing Thye Woo. “Experiences in the Transition to a Market Economy.” *Journal of Comparative Economics*. No. 18, 1994.
- Szelenyi, Ivan & Szonja Szelenyi. “Az elit cirkulacioja? (The circulation of elite?).” *Kritika* 9. 1990.
- Szelenyi, Szonja. “Social Inequality and Party Membership: Patterns of Recruitment into the Hungarian Worker’s Party.” *ASR*. 52 (5), 1987.
- Woo, Wing Thye. “The Art of Reforming Centrally Planned Economies: Comparing China, Poland, and Russia.” *Journal of Comparative Economics*. No. 18, 1994.
- Zaslavsky, Victor. “Contemporary Russian society and its Soviet legacy.” Bruno Grancelli ed. *Social Change and Modernization*. Berlin. New York: Walter de Gruyter, 1995.
- В. Головачев, “У нас есть богатые и бедные, Нет среднего класс а.” *Экономика и жизнь*. No. 44. Москва, 1992.
- Ф. С. Весельков. “Нужная рыночная экономика.” *Введение в рыночную экономику*. СПб: Издательство СПбГУ, 1991.

3. 기타

Moscow News.

러시아 국가통계위원회 및 러시아 중앙은행 발표자료, 2004.

Sztompka, Piotr. "Civilizational competence: A prerequisite of post-communist transition." <<http://april.ibpm.serpukhov.su/friends/education/audem95/Sztompka.html>>.

<<http://www.rferl.org/elections/russia00report/>>.

<<http://www.rferl.org/elections/russia99results/index.html>>.

Российская газета.

최근 발간자료 안내

연구총서

2003-01	북한의 인권부문 외교의 전개방향	최의철	저	6,000원
2003-02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정착	이우영	저	5,000원
2003-03	『조선녀성』 분석	임순희	저	6,000원
2003-04	북한의 개인송배 및 정치사회화의 효과에 대한 평가연구	서재진	저	6,500원
2003-05	21세기 미, 중, 일, 러의 한반도정책과 한국의 대응방안	여인근 외	공저	8,500원
2003-06	부시 행정부의 군사안보전략	이헌경	저	5,000원
2003-07	일본의 군사안보전략과 한반도	김영춘	저	4,000원
2003-08	중국의 한반도 안보전략과 한국의 안보정책 방향	최춘흠	저	3,500원
2003-09	한반도 평화정착 추진전략	박영호 외	공저	8,500원
2003-10	핵문제 전개 및 내부 정치변동의 항배와 북한 변화	박형중	저	7,000원
2003-11	미국의 대이라크전쟁 이후 북·미관계 전망	최진욱	저	5,000원
2003-12	북한의 후계자론	이교덕	저	4,500원
2003-13	김정일 정권의 안보정책: 포괄적 안보개념의 적용	박영규	저	5,500원
2003-14	북한의 사회통제 기구 고찰: 인민보안성을 중심으로	전현준	저	4,000원
2003-15	핵 문제 해결 과정에서 남북관계 및 북한 경제지원 시나리오	박형중 외	공저	10,000원
2003-16	통일에측모형 연구	박영호 외	공저	8,000원
2003-17	동북아 안보·경제 협력체제 형성방안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3-18	국제적 통일역량 강화방안	황병덕 외	공저	10,000원
2003-19	북한 재산권의 비공식 이행	임강택 외	공저	5,000원
2003-20	북한 노동력 활용방안	최수영	저	3,500원
2003-21	대북 인도적 지원의 영향력 분석	이금순	저	5,500원
2004-01	인도주의 개입에 대한 국제사회의 동향	최의철	저	6,000원
2004-02	A CRITICAL JUNCTURE	최진욱	저	4,000원
2004-03	식량난과 북한여성의 역할 및 의식변화	임순희	저	5,000원
2004-04	통일 이후 갈등해소를 위한 국민통합 방안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4-05	미·중 패권경쟁과 동아시아 지역패권 변화 연구	황병덕 외	공저	9,500원
2004-06	중국의 부상에 대한 일본의 인식과 군사력 강화	김영춘	저	4,000원
2004-07	주한미군 감축 및 재배치와 한국의 국가안보	홍관희	저	4,500원
2004-08	남북경협 실패사례 연구: 대북 경협사업의 성공을 위한 정책과제	김영운	저	7,500원
2004-09	북한의 핵 폐기 가능성과 북·미관계	정영태	저	5,000원
2004-10	미국의 대북인권정책 연구	김수암	저	6,000원
2004-11	김정일 시대 북한의 정치체제	박형중 외	공저	10,000원
2004-12	미국의 한반도 정책과 통일문제	박영호	저	5,500원
2004-13	북한의 경제특구 개발과 외자유치 전략 :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특구를 중심으로	임강택 외	공저	6,000원

2004-14	7·1조치 이후 북한의 체제 변화 : 아래로부터의 시장사회주의화 개혁	서재진	저	7,500원
2004-15	CSCF/OSCE의 분석과 동북아안보협력에 주는 시사점	손기웅	저	5,000원
2004-16	남북 사회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대내적 기반구축방안 : 통일문제의 갈등구조 해소를 중심으로	조한범	저	4,500원
2004-17	국제적 통일역량 실태분석	여인곤 외	공저	9,000원
2004-18	대북지원민간단체의 남북교류협력 연구	이금순	저	5,000원
2004-19	<7·1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북한경제 변화 전망 : 실질소득의 변화를 중심으로	최수영	저	4,000원
2004-20	1994~2000년 북한기근: 발생, 충격 그리고 특징	이 석	저	9,000원
2005-01	Toward Greater Transparency in Non-Nuclear Policy : A Case of South Korea	전성훈	저	7,000원
2005-02	유럽연합(EU)의 대북 인권정책과 북한의 대응	최의철	저	8,000원
2005-03	북한의 노동인력 개발체계: 형성과 변화	조정아	저	7,000원
2005-04	Energy Cooperation with North Korea : Issues and Suggestions	김규륜	저	4,500원
2005-05	일본의 보수우경화와 국가안보전략	김영춘	저	5,000원
2005-06	북한주민의 국경이동 실태: 변화와 전망	이금순	저	6,500원
2005-07	북한 청소년의 교육권 실태: 지속과 변화	임순희	저	5,500원
2005-08	미·중 패권경쟁과 우리의 대응전략	황병덕	저	9,000원
2005-09	북한 광물자원 개발을 위한 남북 협력 방안 연구	김영운	저	7,000원
2005-10	청소년의 통일문제 관심 제고 방안	손기웅	저	5,500원
2005-11	러시아 탈 사회주의 체제전환과 사회갈등	조한범	저	6,000원
2005-12	동북아협력의 인프라 실태: 국가 및 지역차원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5-13	북한의 형사법제상 형사처리절차와 적용실태	김수암	저	7,000원
2005-14	6·15 공동선언 이후 북한의 대남협상 행태: 지속과 변화	허문영	저	7,500원
2005-15	북한체제의 분야별 실태평가와 변화전망 : 중국의 초기 개혁개방과정과의 비교분석	이교덕 외	공저	10,000원
2005-16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통일전망	조 민	저	6,000원
2005-17	북한의 경제개혁과 이행	이 석	저	7,000원
2005-18	북한의 산업구조 연구	최수영	저	5,500원
2005-19	탈냉전시대 전환기의 일본의 국내정치와 대외전략	배정호	저	6,500원
2005-20	부시행정부의 대북 정책 추진 현황과 전망	김국신	저	5,000원
2005-21	미국 외교정책에서의 정책연구기관(Think Tanks)의 역할과 한반도 문제	박영호	저	8,500원
2005-22	2005년도 통일문제 국민여론조사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5-23	미국과 중국의 대북 정책 및 한반도 구상과 한국의 정책공간	박형중	저	5,000원

북한인권백서

북한인권백서 2003	서재진 외 공저	9,5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3</i>	서재진 외 공저	10,000원
북한인권백서 2004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4</i>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북한인권백서 2005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5</i>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연례 정세 보고서

2003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03~2004	6,000원
2004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04~2005	6,000원
2005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05~2006	6,000원

학술회의총서

2003-01 신정부 국정과제 추진방향	5,000원
2003-02 한반도 평화변영과 국제협력	5,500원
2004-01 김정일 정권 10년: 변화와 전망	10,000원
2004-02 한반도 안보정세변화와 협력적 자주국방	10,000원
2004-03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	8,000원
2004-04 남북한 교류(화해) · 협력과 NGO의 역할	7,500원
2004-05 한반도 평화회담의 과거와 현재	5,500원
2004-06 북한경제와 남북경협: 현황과 전망	6,500원
2004-07 한국 및 미국의 국내환경변화와 한반도 평화	10,000원
2004-08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변영과 한·중 협력	9,000원
2005-01 북한 경제의 변화와 국제협력	8,000원
2005-02 6·15남북공동선언과 한반도 평화 · 번영: 평가와 전망	10,000원
2005-03 Infrastructure of Regional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 Current Status and Tasks	10,000원
2005-04 Implementing the Six-Party Joint Statement and the Korean Peninsula	10,000원
2005-05 북한 광물자원 개발 전망과 정책방안	10,000원

논 총

통일정책연구, 제12권 1호 (2003)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2권 2호 (2003)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3권 1호 (2004)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3권 2호 (2004)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4권 1호 (2005)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2, No. 1 (2003)	9,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2, No. 2 (2003)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3, No. 1 (2004)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3, No. 2 (2004)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4, No. 1 (2005)	10,000원

영문초록

2003-1 KINU Research Abstracts '02	10,000원
------------------------------------	---------

협동연구총서

2003-01	국내적 통일인프라 실태			10,000원
2003-02	통일정책 추진체계 실태연구	허문영 외	공저	10,000원
2003-03	남북관계의 진전과 국내적 영향	최진욱 외	공저	10,000원
2003-04	법·제도분야 통일인프라 실태 연구	제성호 외	공저	10,000원
2003-05	통일교육의 실태조사 및 성과분석	한만길 외	공저	10,000원
2003-06	국내적 통일인프라 구축을 위한 실태조사 : 경제분야	이상만 외	공저	10,000원
2003-07	북한이탈주민 적응실태 연구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2003-08	종합결과보고서: 국내적 통일인프라 실태조사	박영규 외	공저	9,000원
2004-01	통일인프라 구축 및 개선방안			10,000원
2004-02	정보화시대 통일정책 거버넌스 개선방안	여인곤 외	공저	7,000원
2004-03	남북관계 개선의 국내적 수용력 확대방안 : 분야별 갈등의 원인 및 해소방안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4-04	통일관련 법제 인프라 정비 및 개선방안	제성호 외	공저	10,000원
2004-05	통일지향 교육 패러다임 정립과 추진방안	고성식 외	공저	10,000원
2004-06	경제분야 통일인프라 구축 및 개선방안	양문수 외	공저	10,000원
2004-07	북한이탈주민 분야별 지원체계 개선방안	이금순 외	공저	8,500원
2004-08	종합결과보고서: 통일인프라 구축 및 개선 방안	김영춘 외	공저	5,500원
2004-09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연구			10,000원
2004-10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협력적 아시아			

	인식의 모색	오명석 외	공저	5,500원
2004-11	동북아문화공동체와 유럽문화공동체의 공통성과 차별성	김명섭 외	공저	5,000원
2004-12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한국·중국·일본의 대중문화산업에 대한 비교연구	양영균 외	공저	10,000원
2004-13	동북아 공동의 문화유산에 대한 공동 연구와 관리	박경하 외	공저	10,000원
2004-14	동북아 문화공동체의 동아시아 지역 확대방안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동남아 문화 공동체 형성 가능성 분석	서중석 외	공저	10,000원
2004-15	동북아 평화문화 비교 연구	조한범 외	공저	9,500원
2004-16	동북아 한민족 사회의 역사적 형성과정 및 실태	최진욱 외	공저	6,500원
2004-17	동북아공동체의 행정조직 구축에 관한 연구: 유럽연합의 행정부인 집행위원회 조직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윤종설 외	공저	5,000원
2004-18	동북아 국가의 인적자원실태 및 개발 동향과 인적자원개발 분야의 공동체 형성 가능성 연구	강일규 외	공저	10,000원
2004-19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법적기반 구축방안	전재경 외	공저	8,000원
2004-20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법적 기반 구축방안 : 형사법제를 중심으로	이진국 외	공저	6,000원
2004-21	동북아 여성문화유산 교류협력방안	김이선 외	공저	8,500원
2004-22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청소년교류 협력 연구	윤철경 외	공저	10,000원
2004-23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교육 분야 교류·협력의 실태	한만길 외	공저	10,000원
2004-24	동북아 국가간 관광교류협력 방안(I) : 잠재력과 장애요인	박기홍 외	공저	6,000원
2004-25	동북아 문화공동체 추진의 비전과 과제(I)	김광역 외	공저	4,000원
2004-26	종합결과보고서: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연구	김광역	저	4,500원
2005-01-01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유럽연합의 정책 사례	김명섭 외	공저	9,500원
2005-01-02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한·중·일 대중문화 교류의 현황 및 증진 방안 연구	문옥표 외	공저	10,000원
2005-01-03	동북아 문화공동체의 동아시아 지역 확대를 위한 동남아시아 정치 사회 문화 인프라 연구	서중석 외	공저	9,000원
2005-01-04	동북아 평화문화 형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방안	전성훈 외	공저	10,000원
2005-01-05	동북아 한민족 공동체 형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방안	배정호 외	공저	10,000원
2005-01-06	동북아 지역인권체제(포럼) 구성 추진	최의철 외	공저	10,000원
2005-01-07	동북아공동체의 정책결정기구 구축에 관한 연구	윤종설 외	공저	10,000원
2005-01-08	동북아 국가의 인적자원개발 제도 및 인프라 분석과 공동체 형성 방향 연구	강일규 외	공저	10,000원
2005-01-09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법적지원방안 연구(II)	전재경 외	공저	10,000원
2005-01-10	변화하는 동북아 시대의 체계적인 국경관리시스템 구축에 관한 연구	장준오 외	공저	8,000원
2005-01-11	동북아 여성문화유산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연구	김이선 외	공저	10,000원
2005-01-12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청소년교류 인프라			

구축 연구	오해섭 외	공저	9,000원
2005-01-13동북아시아 3국 학생 및 교원의 상호이해에 관한 의식조사 연구	한만길 외	공저	9,000원
2005-08-01남북한 통합과 통일인프라 확장방안			10,000원
2005-08-02남북한 통합을 위한 바람직한 통일정책 거버넌스 구축방안	김국신 외	공저	10,000원
2005-08-03통일관련 국민적 합의를 위한 종합적 시스템 구축방안 : 제도혁신과 가치합의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5-08-04남북한 통합을 위한 법제도 인프라 확장방안	이철수 외	공저	10,000원
2005-08-05신패러다임 통일교육 구현방안	박광기 외	공저	10,000원
2005-08-06남북한 경제통합의 인프라 확장방안	양문수 외	공저	10,000원
2005-08-07북한이탈주민 사회적응 프로그램 연구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2005-08-08종합결과보고서: 남북한 통합과 통일인프라 확장방안	김영춘 외	공저	10,000원
2005-09-01동북아 NGO 백서	전봉근 외	공저	10,000원
2005-09-02동북아 NGO 연구총서	조한범 외	공저	10,000원

◆ 비매품 ◆

통일정세분석

2003-01	중국의 통일외교안보정책 전망: 10기 전인대 1차회의 결과분석		신상진
2003-02	북한 핵문제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향후 전망		임강택
2003-03	북한 인권실태에 관한 미국과 국제사회의 동향		최의철, 임순희
2003-04	한미 정상회담과 공조방향		이현경, 박영호
2003-05	일본의 안보개혁과 유사법제 정비		배정호
2003-06	북한 병력제도 변화와 병력감축 가능성		박형중, 정영태
2003-07	11기 1차 최고인민회의 개최 동향 분석		박형중
2004-01	2004년도 북한의 신년 공동사설 분석	박형중, 전현준, 이교덕, 최진욱	
2004-02	최근 북한 변화 및 개혁 동향		북한연구실
2004-03	제13차 남북장관급회담 결과 분석 및 전망		조한범
2004-04	최근 북한의 주요 대남논조: 『민족공조』론 강조의 배경과 의도		박형중
2004-05	미 국무부의 '2004년 북한 인권보고서' 분석		최의철
2004-06	제2차 6자회담 분석과 전망		전성훈
2004-07	제4대 러시아 대선결과 분석		여인곤
2004-08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1기 제2차 회의 결과분석		이석, 최진욱
2004-09	제60차 유엔인권위원회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과 우리의 고려사항		최의철, 임순희
2004-10	김정일 국방위원장 중국방문 결과 분석		이교덕, 신상진
2004-11	2차 북·일 정상회담 결과분석		김영춘
2004-12	북한의 고농축우라늄(HCU)프로그램 추진 실태		전성훈
2004-13	2004년 상반기 북한 동향	정영태, 최진욱, 박형중, 서재진, 이교덕	
2004-14	일본 참의원 선거결과 분석		김영춘

2004-15	남북한 전자상거래 추진방안	김영윤, 박정란
2004-16	미의회 '북한인권법': 의미와 전망	김수암, 이금순
2004-17	2004년 미국 대통령선거 동향 분석(I) : 케리 민주당 후보의 외교안보정책 방향	박영호, 김국신
2004-18	2004년 미국 대통령선거 동향 분석(II) : 부시 공화당 후보의 외교안보정책 방향	김국신, 박영호
2004-19	중국공산당 16기4중전회 결과분석	전병곤
2004-20	2004년 미국 대통령 및 의회 선거 결과 분석	김국신, 박영호
2004-21	중국의 동북공정과 우리의 대응책	전병곤
2005-01	2005년 북한의 신년 「공동사설」 분석 및 정책 전망 이교덕, 서재진, 정영태, 최진욱, 박형중	
2005-02	북한의 경제개혁 동향	김영윤, 최수영
2005-03	북한의 「핵보유」 선언 배경과 향후 입장 전망	정영태
2005-04	북한의 '핵무기 보유' 선언 이후 주변 4국의 반응과 향후 정책 전망 박영호, 김영춘, 여인곤, 전병곤	
2005-05	북한인권 관련 미 국무부 보고서 분석 및 정책전망	최의철, 김수암
2005-06	중국 10기전인대 제3차회의 결과 분석	전병곤
2005-07	일본의 보수우경화 동향분석	김영춘
2005-08	농업분야 대북 협력 방안	김영윤, 최수영
2005-09	2004년 북한 영향실태조사결과 보고서 분석	이금순, 임순희
2005-10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1기 제3차 회의 결과 분석	박형중, 최진욱
2005-11	북한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동향 : 제61차 유엔인권위원회의 결의안 채택을 중심으로	최의철, 임순희
2005-12	최근 중·일관계와 갈등요인 분석	배정호
2005-13	북한인권국제대회 동향과 향후 전망	김수암
2005-14	북한 주권국가 인정문제의 국제법적 조명: 동·서독 사례와 향후 통일정책 과제	황병덕
2005-15	동서독간 정치범 석방거래(Freikauf)	손기웅
2005-16	일본 총선 결과 분석	김영춘
2005-17	평화비용의 의미와 실익	김영윤, 이 석, 손기웅, 조 민, 서재진, 최수영
2005-18	미·일동맹의 강화와 주일미군의 재편	배정호
2005-19	주변4국과의 연세 정상회담 결과분석	여인곤, 박영호, 배정호, 최춘흠
2005-20	APEC 정상회의의 의의와 한국의 역할	김규륜

KINU 정책연구시리즈

2005-01	북핵보유선언: 향후 정세전망과 우리의 정책방향	허문영
2005-02	북핵문제와 남북대화: 현안과 대책 이기동, 서보혁, 김용현, 이정철, 정영철, 전병곤, 곽진오	
2005-03	6·15 남북공동선언 재조명: 이론과 실제	홍용표, 조한범
2005-04	광복 60년과 한반도: 한미관계, 남북관계 그리고 북핵문제	김근식
2005-05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의 로드맵: 「6자회담 공동성명」 이후의 과제	조성렬

Studies Series

2004-01	The Successor Theory of North Korea	Kyo Duk Lee
2004-02	Nine Scenarios for North Korea's Internal Development	Hyeong Jung Park
2004-03	The Impact of Personality Cult in North Korea	Jae Jean Suh
2004-04	The Unofficial Exercise of Property Rights in North Korea	Kang-Taeg Lim and Sung Chull Kim
2004-05	A Study of the Social Control System in North Korea: focusing on the Ministry of People's Security	Hyun Joon Chon
2005-01	Strategies for Development of a North Korean Special Economic Zone through Attracting Foreign Investment	Kang-Taeg Lim & Sung-Hoon Lim
2005-02	The Food Crisis and the Changing Roles and Attitudes of North Korean Women	Lim Soon Hee
2005-03	Evaluation of South-North Economic Cooperation and Task for Success	Young-Yoon Kim
2005-04	North Korea's Market Economy Society from Below	Jae Jean Suh
2005-05	Continuities and Changes in the Power Structure and the Role of Party Organizations under the Kim Jong-il's Reign	Hyeong-Jung Park and Kyo-Duk Lee
2005-06	The DPRK Famine of 1994-2000: Existence and Impact	Suk Lee

통일연구원 定期會員 가입 안내

통일연구원은 통일문제가 보다 현실적인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그동안 제한적으로 유관기관과 전문가들에게만 배포해오던 각종 연구결과물들을 보다 폭 넓게 개방하여 전국의 대형서점에서 개별구입하거나 본원의 定期會員에 가입하여 구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원의 간행물 분량이 많아 일일이 서점에서 구입하기에는 번거로움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定期會員制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정기회원에게는 본원의 모든 간행물(연구총서, 국문논총, 영문저널, 학술회의 총서, 판매되지 않는 수시「정세분석보고서」등)을 직접 우편으로 우송해드리는 것은 물론 학술회의 초청 등 회원의 권리를 부여하오니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1. 정기회원의 구분

- 1) 일반회원: 학계나 사회기관에서의 연구종사자
- 2) 학생회원: 대학 및 대학원생
- 3) 기관회원: 학술 및 연구단체 또는 도서관 등의 자료실

2. 회원가입 및 재가입

- 1) 가입방법: ① 회원가입신청서를 기재하여 회비를 납부하신 入金證과 함께 본 연구원으로 Fax 또는 우편으로 보내주시므로써 정기회원 자격이 취득됩니다.
② 본원 홈페이지(<http://www.kinu.or.kr>)에서 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회비를 납부하신 입금증을 Fax 또는 우편으로 보내주시므로써 정기회원 자격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 2) 연 회 비: 회원자격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간입니다
(기관회원 20만원, 일반회원 10만원, 학생회원 7만원)
- 3) 납부방법: 신한은행 온라인 310-05-006298(예금주: 통일연구원)
- 4) 재 가 입: 회원자격 유효기간 만료 1개월전 회비를 재납부하면 됩니다.(재가입 안내장을 발송)

3. 정기회원의 혜택

- 1) 본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 등 각종 연구행사에 초청됩니다.
- 2) 본 연구원이 발행하는 학술지 「통일정책연구」와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를 포함하여 그 해에 발행되는 단행본 연구총서(연평균 30-35권), 학술회의 총서(연평균 5-6권), 정세분석보고서(연평균 5-10권) 등의 간행물이 무료 우송됩니다.
- 3) 본 연구원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복사이용이 가능합니다.
- 4) 시중서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지난자료를 20%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 5) 저작권과 관련하여 DB서비스를 통해 압축한 자료는 제3자 양도 및 판매를 금합니다.

4. 회원가입 신청서 제출 및 문의처

서울시 강북구 수유6동 535-353 (우편번호: 142-076)

통일연구원 통일학술정보센터 (전화: 901-2559, 901-2529 FAX: 901-2547)

